

제424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10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산불 관련 현안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해양수산부
다. 농촌진흥청
라. 산림청(산림과학원 포함)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산림조합중앙회

상정된 안건

1. 산불 관련 현안보고 2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해양수산부
다. 농촌진흥청
라. 산림청(산림과학원 포함)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산림조합중앙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여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산불은 4만 8000여ha에 이르는 역대 최대 면적의 산림 피해, 주택 등 시설 7837개소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안타깝게도 헬기 조종사, 산불 진화대원, 공무원 등 사망 31명, 부상 51명, 총 8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 줌과 동시에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일깨워 줍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우리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산불로 희생당하신 유가족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3월 21일 경남 산청·하동에서 시작되어 경북 의성·안동·청송, 울주·울산 및 지난주 대구 등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피해지원대책과 재발방지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국무총리 주재 가축전염병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장관을 대리해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차 오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잠시 자리를 이석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산불 관련 현안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해양수산부

다. 농촌진흥청

라. 산림청(산림과학원 포함)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산림조합중앙회

(10시05분)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불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이번 동시다발 대형 산불로 막대한 면적의 산림 자원 및 농업·임업 농가들의 시설 피해 등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적절한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산불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6개 기관에서 나와 계십니다만 보고사항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보고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3개 기관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막막해하고 계신 농업인분들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작업 중 다치시거나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도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 모두가 관계부처와 합심하여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피해 현황 및 대응 경과입니다.

산불 진화 직후부터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4월 9일까지 농작물 3795ha, 시설하우스 715동, 축사 237동, 농기계 8308대, 가축 21만 8000두 등 피해를 파악했고 최종 피해는 4월 말까지 중앙·지자체 합동조사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산불 발생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구성했고 주요 피해지역에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긴급대책을 마련하여 영농 재개, 경영·생활 안정, 복구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입니다.

우선 농기자재 공급, 시설·장비 보수 등 피해농업인들의 영농 재개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 농협, 농기계업체 등과 협력해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농기계 수리봉사반 18개 팀을 지원하는 한편, 5500억 원 규모의 농기계 구입자금도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료·농약 등 농기자재를 피해농가에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하고 종자와 묘목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농가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의 가용예산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신개축, 시설 내 장비 개보수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자조금 등을 활용해서 구호물자, 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 진료 지원을 위해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붕괴 위험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농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재해대책경영자금도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긴급생활안정자금, 재해자금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피해가 농축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피해 지역의 주요 품목 생육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배추 등 출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심기, 농자재와 약제 지원 등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비, 생계비, 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에 추정재해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등 재해보험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구비 지원 단가의 현실화, 보조율 인상, 특별위로금 지원 등 피해 농업인

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들은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농업인들의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피해 지역의 농업인 지원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대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산불로 인한 수산 분야 피해와 복구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현황입니다.

4월 8일 기준 경북 영덕·안동·의성에 약 158억 원의 수산 분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선어업의 경우 어선 25척과 기타 선박 5척 등 총 30척의 선박이 전소되었고 74개의 어구가 파손되어 약 9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식업의 경우 5개의 양식장에서 양식어류 47만 마리가 폐사하고 약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시설 피해 규모는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가공업체 3곳의 건물 16개동과 어가 내 저장시설 등이 전소되어 약 37억 원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일에 차관이 경북지역 피해 현장을 확인하였고, 4월 4일부터 중앙합동 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최대 4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선 수협을 통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해보험에 가입된 피해 어선에 대해 4월 9일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어선과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빈틈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최대 1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기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등의 채무 조정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도 지원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해 어선원 보험료 감면과 재해보험료 자부담 환급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피해 어업인들께서 조속히 생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연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선 임대사업과 대체 건조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양식장 현대화 자금 융자와 수산장비 임대 및 구입 지원, 첨단 친환경 양식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양식장 재건도 도울 예정입니다. 피해를 입은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설비지원사업 대상의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경북지역에 조성 중이었던 산지가공시설의 사업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어촌마을 재생도 추진하고 산불로 인한 잣물이 어장으로 유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외에도 피해 복구에 필요한 추가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들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에 고생이 많았을 텐데요, 임상섭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여러 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피해 현황과 산불 대응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먼저 이번 대형산불 대응에 있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산불 대응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산불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불 피해 현황과 산불 대응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100ha 이상의 대형산불 피해 현황입니다.

4월 9일 08시 현재 기준 사망자 31명을 포함한 인명피해 82명, 주택 등 시설 7837개소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영향구역 추정 면적은 4만 7946ha인데 현재 피해조사 중으로 면적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임산물 피해 집계액은 약 129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인력 6만 6871명, 헬기 1180대, 장비 7996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하였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이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하였고 산불 현장통합지휘본부 지휘 및 확대, 현장지원단 파견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대응을 하였습니다. 주불 진화 이후에는 잔불 정리와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으며 현재는 산불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피해 복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불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운영하여 피해 및 복구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가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피해 임가 대상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소득 안정화를 위해 피해 임가의 임산물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송이를 비롯한 채취 임산물은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의 산사태, 토사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를 추진하고 피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산림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목을 신속히 제거하고 피해 수준에 따라 건축용재, 목재펠릿 등 활용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엽수와 활엽수의 혼합림 그리고 내화수림대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임도 개설 등 산림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풍·연무 등 악천후에도 산불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산불 확산 예측 정확도를 높여 선제적이고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대형 진화헬기와 다목적 산불진화차를 조속히 확충하고 전문 교육·훈련으로 산불 대응 정예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불 대응 범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산림청의 권한과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하여 산불 예방부터 복구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대응태세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온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산불 발생 위험은 매우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파쇄와 산림 내 연료물질 제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감시를 강화하고 전면적 홍보를 추진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산불 대피를 위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신속한 진화를 위한 헬기, 진화차량, 인력 등을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형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윤준병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어기구 예.

○윤준병 위원 최근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중국 측의 양식시설 2기가 설치

때 있고 양식보조시설 1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게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 또 해경의 조치 내용 또 외교부의 조치 내용들을 확인코자 했는데 조치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전 질의가 끝나고 오후 질의 전까지 해수부 또 협력을 했으니까 주무부처가 해수부인 만큼 관련된 외교부나 또는 해경에서 조치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어기구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산림청에 산불이 나고 곧바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아직 받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을 두고서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가 산불을 더 확대시키고 지속시킨다는 환경단체 중심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최근 20년간 조림사업을 할 때 수종 그다음에 사유림과 국유림을 구분해서 식재 면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오전 질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산림청과 해수부, 임미애 위원님과 윤준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병진 위원님, 첫 번째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평택을의 이병진입니다.

대형산불로 운명을 달리하신 공무원들, 진화대원,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산림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산불 진화용 헬기의 골든타임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골든타임제는 산불 발생 신고 접수부터 최초 물 투하까지 시간을 얘기하는데 50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조금 상황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병진 위원 20년부터 23년까지는 이행률이 한 20~40%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82%로 아주 급상승했어요.

PPT 한번 보실까요, 1번? PPT 바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때 이행된다는 것은 산림청이 책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다…… 그런데 1년 만에 42%나 급상승했어요. 그렇지요? 무슨 집계 방식에 변동이 생겼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23년도, 24년도에 골든타임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습니

다. 신고부터 물 투하까지 50분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출동 지시부터 물 투하까지 이렇게 골든타임을 운영해서 집계한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협의한 결과 골든타임을 신고 접수해서 물 투하까지 50분으로 하되 과거에는 산림청 헬기만 가지고 산정을 해서 산림청 헬기 50분, 지자체 임차 헬기 30분으로 산정하던 것을 최초 물 투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자체·산림청 헬기 관련 없이 50분 이내에 물 투하하는 걸 이행률로 협의해서 고쳐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진 위원** 협의해서 고친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지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실적을 조작해서 국회에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는 신고 접수부터 물 투하까지의 데이터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제출할 때는 출동 지시부터 물 투하까지의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PPT 두 번째 한번 보시면 감사원에 의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한다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한 정황 총 8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고 또 국회를 본의 아니게 모독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특히 청장님이 차장으로 재직하실 때 이런 골든타임 이행실적 제출한 바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병진 위원** 그런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재직했을 때 바로 이것도 모르고 여전히 그 자료가 맞는 걸로 생각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병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골든타임 실적을 국회에 제출했던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119나 이러한 신고부터 헬기를 출동시키게 되면 오인신고라든지 이런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헬기로 진화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인데 헬기가 출동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헬기가 가동되게 되면, 일정 가동시간이 되면 또 정비를 들어가게 돼서 좀 실효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처음에 신고 접수가 되고 헬기로 인해서 진화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출동 지시한 다음에 하는 걸로 골든타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데이터하고 신고 접수부터 하는 그런 단계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은 통일된 기준으로 해서 또 지자체하고 산림청 헬기하고 별개로 하던 것들을 통일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요.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이런 감사원 지적에 의거해서 판단해 봐도 이런 허위자료 제출 행위는 말이지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혹시 이것과 관련된 실무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감사받아서요 경고를 받았습시다, 감사 처분 결과.

○**이병진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산림청을 저는 믿고자 합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도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산불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5년간 발생한 건수를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2224건, 매년 평균 445건입니다. 2000건이 훌쩍 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발화자에 대한 검거율은 37%밖에 안 돼요. 제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공판까지 이어진 사건은 최근 5년간 129건밖에 안 됩니다, 129건. 상당히 미비하고 또 처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소 중지라든지 혐의 없음 그다음에 약식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도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성묘객 한 분의 불씨 때문에 됐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고 소중한 생명 서른한 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상 제가 이어서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입니다.

우선 농림축산부와 해수부 장관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이번 산불 진화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직원들도 다들 너무 고생 해서 정말 힘들 텐데 그래도 피해 보신 우리 농민들, 어민들 또 산주들 생각을 하셔서 좀 더 힘내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부장관님께 먼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김상욱 위원** 지금 직접 상황을 챙기시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상욱 위원** 피해자분들께서, 지금 농민들께서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어려운 부분이 한두 대목이 아닌데요. 일단은 주택 소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일단 농경지로부터 지금 떨어져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가 다 불에 타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지역은 과수, 특히 사과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말하자면 불이 나서 피해목이 어느 정도일지를 아직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리 수확을 해서 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나 농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사실 보상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불편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상욱 위원** 제가 여쭙본 것이, 기계적으로만 피해 내역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으셨을 것이고 정말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내 가족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마음으로 좀 더 세심하게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독여 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챙겨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김상욱 위원** 지금 이런 피해가 있고 나면, 사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기계가 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는 일인데 결국 이런 화재도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이런 보험으로 리스크를 미리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금 저희가 재해보험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73종의 농작물에 대해서 재해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73종 전부 다 평균을 내면 한 54%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많은 경북 지역의 특성상 사과의 경우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100%입니다, 경북 지역이. 그런데 품목별로 좀 달라서요 마늘이나 특히 한우의 경우는 또 재해보험 가입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차이가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욱 위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농촌지역이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낮고 또 산지가 많고 하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좀 사후적인 거긴 하겠지만 이런 관련된 보험이나 이쪽도 부에서 신경을 써서 농민들께서 이런 일들이 있으실 때에 피해 보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김상욱 위원** 그리고 주택 관련된 말씀을 안 그래도 장관님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시설 곳이 없다 보니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김상욱 위원** 지금 재해 지역 지정되면 3600만 원 지원 나가나요, 가구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회 재난인 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 돈으로는 어떻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욱 위원** 예, 당장 거주지 확보하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물론 부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피해 보고 계신 분들께서 ‘우리가 고립됐다.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 절대 들지 않도록 좀 더 정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에서 산불이 지금…… 제가 보험 관련된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는데 풍수해보험에서 산불이 보험 사고에 포함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풍수해보험에서 산불이요?

○**김상욱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불은 사회재난입니다.

○**김상욱 위원** 그렇지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농업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100% 막지는 못하겠지만 보험제도와 관련해서 부에서 나서서 어떻

게 농민들의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봤을 때 체계적으로 피해 보전이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번에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농업인들한테 설명도 많이 드리고 산불 등을 포함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상품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의 때, 긴급현안질의 때도 그 얘기 드렸는데 장관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행안부에서는 재난을 사회재난 그다음에 자연재난 이렇게 구분해서 딱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류 기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 상황, 특히 산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경계가 모호하고 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실제로 피해가 농가, 어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의 원인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증폭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혹은 사회재난이 기후와 맞닥뜨려지면서 이게 피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난의 분류체계 이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이것을 복합재난으로 분류해서 구제책을 마련하고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는 이런 것을 사회 변화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번 산불을 보면서 이것을 사회재난으로 했는데 이게 자연재난과 복합적으로 진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으로 나누어서, 말하자면 복구하거나 지원하는 체계도 분리하고 이러는 것이 다소 혼란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저는 국무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림부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사회재난으로 분류할 때 원인을 보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을 누가 유발했느냐, 불을 누가 질렀느냐 이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영덕에서 이 피해를 받은 어민들 입장에서 이 불을 누가 질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8시간 만에 날아와서 영덕에 와서 배까지 태웠다면 이것은 천재지변 할 일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난을 분류해야 하는 것이지 행정의 편의상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라는 것 가지고 재난을 분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난의 분류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농림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원체계도 바뀝니다, 보상하는 내용도 바뀌고. 영덕의 어민이 배 태웠다고 해서 산불 낸 의성의 성묘객을 찾아가서 민사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안이한 분류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리고 아마 국회방송을 통해서 오늘 현안질의를 대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 산림청, 해수부장관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서 피해민들한테 제시할 것인가 이게 되게 궁금할 텐데요.

울진에 지난번 22년도에 산불 났을 때 조경수 키우는 사람들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들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보면 산림조합중앙회가 보험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경수를 키우는 사람들은 보험 상품이 없어서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다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벌써 22년도에도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아직도 이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임목 지원, 임목재해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러면 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임산물 관련된 재해보험은 지금 8개 품목만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임산물이 아니고 임목이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산물 범주 안에 조경수도 포함이 되고요. 임목도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서 8개, 밤·감·대추같이 이런 품목들, 단기소득임산물 종류로만 돼 있고 나무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다는 것 다 압니다. 피해자들 당연히 알지요. 중요한 건 이게 벌써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해서 아직도 그분들 항의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동모금회에 모금된 재해구호기금이라도 좀 이렇게, 국민 성금이라도 조금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도에서 이 문제가 아직도 포함되고 있지 못하다는 건 산림청이 너무 안이하게 이 문제를 대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는 분명하게 재해보험 운영 가능한 보험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보험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입하시는 분들의 부담하고 또 그거와 관련된 피해보상액하고를 비율을 맞춰서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임목이나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으로 운영하기가 현재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와서 어려운 점과 현실적으로 그 어려운 점하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해수부장관님, 이번에 양식장 피해가 굉장히 큼니다. 그런데 이 양식장이 바다에 있는 양식장이 아니라 육상에 있는 양식장들 피해가 큼니다. 배까지 탔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어서, 사실 이런 경우에도 수협 양식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양식 수산물에 재해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도개선해 가지고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다행히도 작년 4월에 저희가 보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늦기는 하지만 5월부터는 이것이 화재로 인한 양식 시설물들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벌써 만들어 놔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하고는 조금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 방식?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재해보험제도는 개선 충분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재로 인한 건……

○**임미애 위원** 이번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행안부랑 같이해 가지고 재해복구비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현장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라는 것이 되게 적극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변하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따 오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진천·음성·증평 임호선 위원입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호선 위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경북과 경남을 오가시면서 지휘하셨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호선 위원** 정말 앞서 저희가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산불예방진화대원분의 순직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봄철 대형 산불이 특정 연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시화되지 않을 까라고 하는 우려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지금 후속조치를 여러 가지로 여러 단위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 대응이 과연 산림청의 역량 가지고 가능한가? 지금 지휘 체제가 이원화돼 있는 문제, 산림청장님하고 지자체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소방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또 산림청 내부에서도 지방환경청하고의 문제와 또 헬기를 운영하는 이 단위하고도 지금 구분돼 가지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의 지휘 체계적인 뭔가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산림청이 보다 전문적으로 산불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방한테, 이 산불 진압에 대해서는 소방에 기능 이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일반적으로 불을 소방에서 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산불의 특성하고 일반 도시 지역이나 건물에서 나는 불의 특성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 사례도 보다시피 이게 1개 기관이 판단하거나 담당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재난 종류가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산불에 대한 이해나 산에 대한 기능이나 또 조성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관에서 산불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하고 산림, 광역적으로 나는 산불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외국들도……

○**임호선 위원** 짧게 말씀 주시겠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다른 외국들도 대부분 산림 분야에서 산불을 담당하고 있고 소방 분야에서는 인가 피해라든지 시설물 피해,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산불과 관련해서 예방·진화·복구, 예방이나 복구도 전부 다 산불하고도 관련성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나름대로의 외국 사례를 포함해서 전문성을 갖추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더 세세하게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산불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항공 분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헬기 기반 아닙니까? 노후화된, 고령화된 문제 여러 가지 많은데 고정익 도입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가 사실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났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고정익 도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 고정익기에 탑재할 수 있는 물탱

크 예산도 사실은 80억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송기를 산불 기간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행안부, 국방부, 산림청, 여러 기관, 한 20여 회 정도 회의를 계속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조금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이 났습니다.

○임호선 위원 아까 지휘체계에 이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순직하신 분들 포함해서 산불예방진화대가 구천육백네 분이 계시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게 산림청의 직접일자리사업이라 고령화 문제가 있고 또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도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몇십 명씩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산림청장님은 사실 산불에 지휘권이 없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호선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분산 배치되어 있고 막상 지휘권은 또 안 갖고 계시고, 그리고 직접일자리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 또 교육훈련 체계, 여러 가지 근무 여건, 보수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무척 아주 열악하고 부족하다.

특히 산불예방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앞으로 산사태하고 또 병충해까지도 내년 2월부터는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산림청 역량 가지고 아무리 지자체하고 이런 협조 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금년 내에 빠른 대책이 요구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금년에 예를 들어 예산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전문예방진화대는 구천 분, 연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자체에서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요. 특수진화대는 산불에 직접 붙어서 하는……

○임호선 위원 435명.

○산림청장 임상섭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좋은 인력들이, 젊은 인력들이와 가지고 담당하는 것하고 예방진화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처우와 관련된, 굉장히 처우와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급여라든지 또 그게……

○임호선 위원 잠시만요. 잠깐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면 이분들 교육훈련기관도 없잖아요. 전문교육훈련기관도 없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지금 만들려고 계속 몇 년째 하고 있고요. 산림재난교육훈련센터를 만들려고 몇 년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라든지 이게 좀 더더서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호선 위원 불과 이 인원, 이 정도, 1만 명 정도 교육시킬 수 있는 인원인데 이걸 빨리 대책을 안 세우고 전문성을 못 갖춘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훈련기관 반드시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양수 위원님을 대신해서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어기구 예.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산림조합하고 농협중앙회장님 와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오전에 질의가 산불에 국한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쭙보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고 오후에는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좀 드려 봅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간사님들끼리 상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번 산불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불 자체가 남긴 상흔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진화 과정에서 헬기 추락사고도 2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21대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헬기 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러시아산 헬기 위조부품 계약 문제도 지적을 했었지요. 그런데 산불만 나면 헬기 추락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것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락한 헬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기령이 한 44년 됐고, 맞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총 50대 정도 되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20년 된 헬기가 35대, 전체의 한 70% 되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다 기준 맞춰서 관련된 프로그램, 정비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없다 하지만 너무 노후화되면 이렇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라든가 규정 이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 관련된 규정과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재난 관련된 건 우려나 지적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별도로 협의를 해서 특별한 규정을 만드는 건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박덕흠 위원 결국은 헬기 안전성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덕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내구연한에 대한 연구용역 이걸 좀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서 도입한, 운영하는 헬기 중에서 내구연한이 정해진 건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 말고는……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PPT 띄워 주시고요.

이게 미국의 고정익 항공기 진화 시스템인데 담수량이 1만 8000ℓ 보다도 더 많다고 그러지요, 한 세 배 가까이. 맞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많은 건 3만ℓ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세 배 넘으니까 한 3만ℓ 되는데, 이런 효율성을 평가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었지요, 이것?

○산림청장 임상섭 예, 금방……

○박덕흠 위원 왜 불발됐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가 처음에 도입한 것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수송기를 활용해서 물탱크를 착탈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박덕흠 위원 아니, 아까 그건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산불 진화 장비 고도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서 이것을 도입을 한다거나 꼭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이번에 굉장히 과거에 비하여 광역적으로 산불이 났고 또 특히 야간에 야간 강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땅한 진화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라든지 수송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실화로 인한 산불이 또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덕흠 위원 그리고 이게 산림재난방지법에 보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산림보호법하고 산불에 대한 처벌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우리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제도, 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5년간 산림보호법으로 처벌받은 산불 가해자 1심 판결문을 봤더니 107건 중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99건으로 91.6%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죄질이 나쁜 것만 실행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문화유산 보존법처럼 가중죄 조항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 피해 규모가 클 경우에 가중죄를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것 검토할……

○박덕흠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산불 신고자 포상금 제도 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2023년도에 계획을 밝혔는데 아직도 시행령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상금 제도를 법으로 아예 상향해서 만들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산불의 포상 제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신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방을 확실하게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농가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이번에 보니까 경북 지역이 마늘 가입률이 20%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미가입 농가 복구 지원 이것 철저하게 좀 세워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이 농작물재해보험을 보면 나무손해보장특약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거의 미가입이 돼 있더라고.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저렇게 돼 있는데 묘목을, 산불로 나무가 타면 식재를 해야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그런데 과수목이 고사해서 또 벌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나무손해보장특약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과수원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나무보장특약 가입률이 76.8% 정도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히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장특약을 들은 것하고 안 들은 것하고 사실 굉장히 보상비 차이가 심한데요. 이게 또 다년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5년간 소득이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생계비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덕흠 위원 그런데 또 산불이 나서 사과를 저장해 놓은 게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건 또 보험이 안 된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것도 화재보험을 들어 놓은 경우가 아니면 보장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지금 특별히……

○**박덕흠 위원**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대책을 지금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박덕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산불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정 현안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2월 3일 내란 계엄 12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국정에 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이 두 분 와 계시는데 오늘 파면 이후에 처음 열리는 상임위, 국민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두 분 장관님들께서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송미령 장관님부터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궐위 상태가 되신 것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다음 정부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농정의 공백이 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강도형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까지 계속, 제가 계엄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사법 체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은 존중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국정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해양수산 분야 업무가 좀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소임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뭐 당연한 말씀 같은데 저는 두 분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국정에 관해서 보좌하고 또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또 잘못이 있으면 연대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 대표인 우리 상임위에 나와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셔야지요.

아니, 국민들이 8년 만에 또다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3년도 못 돼서 그만두는 사태에 직면을 했어요. 국무위원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로 당장 그만두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정 공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무는 계속 수행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나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도대체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강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것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모든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으로 생각하고 대통령만 파면되면 국정이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파면된 지 얼마 안 돼서 지난주 화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지명을 해 버렸어요, 대통령 뭉이긴 합니다마는 아직 임기도 다 안 끝난 재판관들을. 제가 보기에선 보충적으로 현상유지적 권한만 갖고 있는 권한대

행이 무지막지하게 대통령 뒤편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서 깜짝 놀랐어요.

더구나 지명된 분이 이완규 법제처장이시던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겠지만 내란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밤에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민정수석 등과 함께 안전가옥에서 회동하면서 휴대전화도 교체하고 내란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공수처에 고발까지 하고 또 경찰들이 소환 조사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분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을 공개리에 반대했어요. 명색이 법학 박사고 법을 제일 잘 안다는 분이 이렇게 최소한 내란 공범이거나 동조한 세력인데 이런 분을 그냥 국민들 뜻을 거스르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국무위원들 동의를 받아서 지난 화요일 날 지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강 장관님, 그때 국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덕수 대행이 이야기를 했고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동의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헌법재판관 임명도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명하는 절차……

○**주철현 위원** 아니, 지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분을 지명해서 임명하겠다는 건데 그할 때 국무위원회 심의를 안 거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심의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요.

○**주철현 위원** 그러면 그날 모든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돼 있던데 어떻게 동의하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철현 위원** 지명할 거다, 이 두 분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주철현 위원** 송미령 장관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어보시던가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권한대행께서 여러 상황을 심사숙고하셔서 두 분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지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철현 위원** 참 이게 한덕수 대행 정말로 저는…… 권한대행에 불과한 분이 국회 뒤편을 국회에서 추천해서 형식적인 임명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중대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냥 보충적인 권한, 현상유지적 권한밖에 없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올해 3월 24일 날 선고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 보게 되면 ‘권한대행은 예비적·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 지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한덕수 대행 자체가 작년 12월 대국민담화에서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꼭 버텨 놓고 이제 와서는 4개월도 안 돼서 바로 또 후임을, 고유권한을 행사를 했어요. 정말 가증스럽다는 말을 드리지 않

을 수가 없고.

자기가 내뱉은 말 4개월도 안 지났어요. 이걸 기억을 못 할 정도로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정말 양심도 없고 정말로 나쁜 이런 분이 일국의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두 분들의 의견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인사권이 아니고 헌법적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권한대행이 장관 새로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임명하는데 임기 6년이에요. 새 대통령이 2개월 뒤면 임명할 수 있는데 이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송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대행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정말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대로 좀 하십시오. 역사와 형사 법정, 현실의 법정, 두 분 피해 안 받으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청장님, 여기 잘 안 보여요. 차관님들 안 오시는데 좀 자리 바꾸면 안 됩니까?

○**위원장 어기구** 차관님들이 오후에 오실 겁니다.

○**김선교 위원** 글썄, 이것 뭐 질의를 하려고 해도 보여야지……

○**위원장 어기구** 옆 자리로 이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우선 산불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대형화·연중화되는 산불 대응 체계 총체적으로 정비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지금 범정부 대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더구나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산불은 발생 빈도가 잦고 강도와 규모도 커지고 있다, 과거의 산불 예방 지침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불 대응 체계 정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의하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김선교 위원** 청장님, 이번 산불 대응 체계 대책으로 가장 시급하게 보장돼야 할 부분

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헬기하고 진화 차량, 장비 확충하는 문제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진화 대원들 전문화·고도화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임도나 진화와 관련된, 산림 관련된 인프라 확충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김선교 위원** 산불 진화 시까지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와 가지고 대개 지적인 것이 초대형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 그리고 노후 산불 진화 헬기 시급한 교체와 보강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담수량 5000ℓ 이상의 대형 산불 진화헬기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에 대한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소형 헬기가 11대 정도 있는데 그걸 중대형으로 지금 교체할 계획도 있고요. 2030년까지 적정 수준 한 70대까지, 산림청 운용 헬기 총 70대까지 늘리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곧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5000ℓ 이상 헬기를 몇 대나 도입할 계획이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추경에서는 헬기 도입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직 기재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김선교 위원** 지자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산불 진화에 투입하는 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서 노후한 헬기에 대해서 순차 교체 수요를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지금 지자체에서 임차하고 있는 헬기 78대에 대해서 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김선교 위원** 21대 때 통과시킨 산림보호법 개정 중에 지자체가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를 도입할 경우 산림청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법으로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못 세웠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재정 당국하고 예산 관련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산림청이나 기재부에서 그런 심각성을 몰라서 못 세워 준 겁니까, 청장님의 꾀밭이 없어서 못 세운 겁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지자체의 헬기……

○**김선교 위원** 그게 왜냐하면 헬기가, 그 임대 헬기가 1일에 얼마씩 비가 오나 이렇게 사용을 못 하는 날이라도 계속 상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요, 하루에 헬기 임대비가?

○**산림청장 임상섭** 전체적인 금액은 아는데 하루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전체 얼마 들어갑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한 72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 그걸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 예산?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서 했는데 어쨌든 기재부에서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예산을 못 세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세울 수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 의성이나 산청 지역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됩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아니, 논의가 아니고 확실히 세워야지요,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면. 그래서 내가 대응 체계에 대해서 여쭙어본 것 아닙니까.

세워야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청장님, 산불 재난에서 야간 헬기는 왜 가동되지 못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우리 야간 헬기 운용할 수 있는 게 한 7대 정도 됩니다. 7대 정도가 있는데 수리온이 지금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규정, 이번에는 야간에 강풍이 너무 심해서 운용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선교 위원** 교관이 원활히 양성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합시다만 과거에도 한 번 투입해서 안동 산불 때도 진화해 본 적이 있고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 운행 기준도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안전교육에 대한 이런 교육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헬기 조종사들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선교 위원** 예.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뮬레이션 관련된 시뮬레이터 활용해서도 하고 있고요. 투입할 수 있는 교육은 충분히 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서…… 기재부 같은 데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동안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 또 농협중앙회장님, 산림조합중앙회장님은 주질의가 끝나면 이석하기로 간사 간 협의가 됐으니까 위원님들 주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먼저 산불 피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힘써 주신 산림청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대이고 진화 인력이나 장비 또 초기 대응에 있어서도 문제가 지적되었고 우리나라의 산림구조 자체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형화, 고속화, 장기화를 키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23년도 강원 산불 이후에 산림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 발간에 따르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현 435명에서 앞으로 5년 동안 250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증원된 인력은 0명입니다.

그리고 또 산불관리통합규정 있지 않습니까?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르면 제17조의2에는 산불 진화대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조에 안전장비 지급은 이거, 이거, 이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산불 진화 과정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교육기관도 없고 교육도 실시되지 못했고 그리고 진화복이나 안전장비도 부실 그 자체였다, 그런 장비가 지급되었다, 그로 인해서 아까운 목숨들이 많이 사망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감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문제 지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산림청이 발행한 산불 진화대원 복제 지침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침서에 따르면 진화복을 납품하려면 시험기관의 시험 절차를 거쳐서 산림청이 지정한 8~9개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만 진화복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표도 이렇게 받고 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시험성적표를 받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시험성적표를 통과한 진화복을 지금 몇 벌이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가 기준을 한 가지라도 통과하지 못한 진화복이 보급된 걸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7% 정도가 기준 충족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산림청이 스스로 정한 지침을 어기신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그리고 8~9개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최소 4개 정도의 기준은 부합해야 된다. 그런데 4개의 기능을 아예 없애 버린 제품도 많이 지급되었고 그리고 수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 중에서 1개 이상의 기능이 없는 진화복이 무려 4561벌이 지급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이런 시험성적표를 제출해서 납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1000벌 이상이 나갔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납품 관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구매하는 절차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구매하는 기관들이 국유림관리소라든지 시군 단위로 이렇게 나뉘져 있습니다. 통일된 지침이나 기준은 산림청

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한 건 지적하신 것처럼 1만 1000벌 중, 2023년 말부터 구입한 진화복이 1만 1000벌 정도 되는데요. 기능이 하나라도 부족한 게 한 619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종덕 위원 산림청 스스로 정한 지침을 어겼고 제대로 납품 관리도 안 되었고 그리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이 안전복을 진화대원들에게 제공한 것 아닙니까. 이래서 피해가 발생한 거고,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산림청의 심각하게 안일한 인식과…… 이것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급했던 것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23년부터 시험성적을 첨부해 구입한 구입 내역을 포함해서 공고에서부터 납품까지 그리고 이후 사후 관리까지 예산이나 시험성적서, 지급 현황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 일체를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게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안전불감증으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그리고 또 진화대원들 같은 경우에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어요. 창녕군청 소속 진화대원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진화용 헬멧이 아니라 건설용 헬멧을 썼고 물받이 그다음에 물통 이게 이분들에게 지급된 안전장비의 전부였어요. 이렇게 어떻게 불을 끄니까? 가서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현장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잠깐만 짧게만 설명……

○전종덕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공중진화대·특수진화대·전문예방진화대 3개로 나뉘어 있는데요. 지금 헬멧 관련된 건, 방염 처리 안 된 헬멧은 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임무가 잔불이나 뒷불 정리기 때문에……

○전종덕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청장님, 세 형태의 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방진화대·특수진화대·공중진화대 있는 것 알고 있고.

그런데 예방진화대는 사실 투입되면 안 되지요. 특수진화대가 투입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산불이 계속 번지니까 누구든 가서 불을 꺼야 된다고 해서 간 것 아닙니까, 불 끄러. 그러면 이 일반진화대가 그런 장비를 갖추지 못하면 이분들이 그런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가도록 하고 그것을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을 지켜야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투입이 됐고 그렇게 투입됐다가 그분들이 사망을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산림청이 책임감을 느끼고 대책을 세우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잠깐 정리하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구조적 문제, 우리 산림구조의 문제, 최근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림청 백서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산림의 39%가 침엽수림, 휘발성이 강한 침엽수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휘발성이 강한 소나무를 포함한 이런 침엽수림을 유지하고 오히려 활엽수를 수년간 다 베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산불의 피해가 컸던 의성 지역의 경우는 21년 대비 70%가, 청송은 88%가, 안동은 50%가, 하동은 63%가, 산청은 59%가,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의 숲가꾸기 사업이 소나무 밀집 지역이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의 숲가꾸기 사업이 21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가 더 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는 산림구조의 변화와 산림구조를 바꾸는 이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은데 산림정책 때문에 많다고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조림 면적 관련된 건, 소나무 조림은요 우리나라 전국 소나무림의 6% 내지 7%밖에 안 됩니다,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은 것은.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경북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소나무를 인공적으로 조림한 게 2% 내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상 소나무가 능선부라든지 척박한 지역에서 제일 잘 자라고 있고 특히 경북·강원 지역에 소나무림이 제일 우점하고 잘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숲가꾸기도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숲가꾸기가 마치 소나무만 남겨 놓고 다른 활엽수를 없애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숲가꾸기라는 것은 산림 내의 나무양의 밀도를 조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림 내 연료 관리를 간벌이라든지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소나무림이 많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이 그런 형태로 된 것들이고요. 그게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소나무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숲가꾸기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목재 생산 목적이란지……

○전종덕 위원 산림청이 바라보는 시각과……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전문가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조 사업을 변경이 필요한 건 변경을 해야지요.

○위원장 어기구 추가질의, 보충질의 있으니까요, 전종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입니다.

이번 산불 피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요. 또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장관님, 청장님 또 관련 공무원들 또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문금주 위원 이번 영남권 산불의 원인은 결국 사람의, 인간의 실화잖아요. 성묘객, 용접 불꽃, 예초기 이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실화 치고는 너무나 피해가 커요, 희생자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번 대형 산불의 어떤 원인은 비록 인간의 실수로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또 이상기온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문금주 위원 기상청 발표 자료로도 확인이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남권 산불이 최고조에 달하던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보면 경북의 의성·안동·청송 등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모두 평년보다 8℃ 안팎으로 이상고온 현상을 보였었고 또 상대습도는 평년 대비 15% 낮았던 말이지요.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그랬고 이게 갈수록 산불 피해가 심한데 특히 이번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산불 피해 확산은 이상기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동의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피해를 우리가, 정부가 보상해 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복구비 쪽이 재해대책으로도 하고 또 우리가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랑 그렇지 않은 농가를 구분해서 광범위하게 좀 지금 지원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발표해 주셨는데 솔직히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관계부처랑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갈수록 대형화, 항구화될 텐데,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텐데 이번 기회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지난번에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산불 피해, 산불이 확산되는 것, 그것도 이상기후로 확산이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농어업재

해대책법상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 어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시고요. 저도 지금 관련해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없고 겨우 하는 게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추정 보험금의 50%만 우선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북과 경남 피해 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비율을 보면 50% 정도 밑도는 그런, 전국 기준보다도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보험으로만 보장을 해 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관님, 좀 전향적으로 농어업 재해 대책……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했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언제까지 예비비, 특고세 이런 걸로만 땀질식 처방을 할 거냐. 이제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재난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정부가 좀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보장을 시기가 됐다, 타이밍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 잘 살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산림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보니까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있네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아마 산불 확산 예측 결과를 분석해서 지역 주민 대피 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21년에 도입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작동이 됐다고 보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초기에 산청, 하동이라든지 경북 의성·안동까지는 그래도 잘 활용을 했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강풍으로 인해서 청송, 영양까지 확산됐을 때는 그 스케일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지역 단위가 아니고 광역 단위라 가지고 좀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고 예측 시스템에 평균 풍속만 반영이 돼 있는데 최대 순간 풍속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번 기회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금주 위원**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관련해서 주민들 대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제가 보니까 좀 우왕좌왕하고 그걸로 또 피해를 키웠다는 보도를 보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런 예측 시스템 또 매뉴얼화가 좀 돼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한 분석도 하시고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가짜뉴스가 또 횡행을 하더라고요. 산불 피해 관련해서 이게 무슨 간첩의 소행이니 중국 소행이니 하는 그런 음모론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저희들이 발화자와 관련해서 특정이 되면 언론 통해 가지고 다 공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온 것들은 대부분 발화자, 발화 원인들을 추정이나 다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아닌 것입니다. 아닙니다.

○문금주 위원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하시고 엄단할 그런 마음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부산 사하율의 조경태입니다.

산림청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소방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재해를 또 막아 내는 데 예방이 가장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해수부장관님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3일 김대중 정부 때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겹치는 구역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즉 PMZ로 규정해 놓은 거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한중어업협정을 맺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관님, PMZ 지역에 어업과 항행만을 할 수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어업에 대한 부분으로 한중어업협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게 항행이나, 그러니까 배가 지나다니는 거지요. 여기에 방해 되면 안 되지요, 원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지요? 어업 행위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특히 양국의 이익인데 타국의 이익만을 쫓는 거는……

○조경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지요. 선란 1호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에…… 이거는 국민의힘 정부지요. 윤석열 정부 때 선란 2호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나 영토 방위에 대한 개념이 매우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란 1·2호를 저희들이 보니까……

도표 보십시오.

지름 70m, 높이 70m로 되어 있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보고받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00년도에 1호기가 발견되고 나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문제 제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국가의, 우리나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이 영향받지 않도록 계속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작년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항의가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지금 속국 또는 약소국으로 보고 있는 명백한…… 우리나라를 업신여깁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해를 자기들의 영해로 만들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최근에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새겨 놔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런 선란 1·2호를 만드는, 대형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한중어업협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어업협정에는 위반되지는 않고요. 지금 경계미확정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권리 행사는 자제해야 됩니다.

○조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중어업협정에 위반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 규정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니까 그 약점을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2013년부터 했던 남중국해 사건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필리핀이 2016년도에 국제 중재재판소에서 승소했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

○조경태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지금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다 보면 서해 바다를 중국에 뺏길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주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수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지금 비례 대응 조치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제가 지금 세 차례 해수부 관계자, 외무부 관계자를 만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18년 2월에 중국에서 방금 말씀하신 잠정수역에 대형 부이 1기를 설치한 걸 발견하고 8개월 만에 우리나라가 대형 부이를 비례 설치한 바가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안 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이, 특히 정지형…… 해양환경조사를 위한 대형 부이 설치하는 그 상황상 굉장히 용이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양식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장관님, 하나 만드는 데 얼마쯤 들어가지요, 설치하는 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500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300억에서 500억 들어가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지금 대왕고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시추 하나 하는 데 얼마 들어갔지요, 비용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1000억 들어갔잖아요.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는 데에다가 예산을 1000억 켜거나 넣으면서 이거는 명백히 우리 영토를 지키는 데 500억, 300억이 아깝다? 이거 어떤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네들이 이야기한,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 정부가 이야기했던, 여기에 보면 심해 양식업을 한다 했어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장한테 들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도 있는 자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양식업에 대한 경제성이 없다. 지금 연어를 기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경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성이 없는데 왜 하나도 아니고 2개를 했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장관님, 여기에, 지금 선관 1·2호에 혹시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주기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경태 위원** 주기적이 아니고 상주를 하고 있어요. 몇 명이 상주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저보다 더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7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왜 상주하겠습니까? 왜 상주하겠냐고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훨씬 더 빨리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조경태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지금 전반적인 타당성들 보고 바로 예산에 대한 조치 작업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예,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조경태 위원 예, 저희들, 여야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해양주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먼저 이번 대형 산불 현장 속에서 화재 진압과 주민 대피, 피해 수습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써 주신 산림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산불진화대원 여러분과 소방당국,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생자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눕니다.

조금 전에 전종덕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소방·진화복과 관련해서 어쨌든 진화복을 비롯한 장비가 현장을 견딜 수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진화복 기능성 시험 결과에 대해서 산림청이 그간 안이한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일부……

○문대림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가 있는 진화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 구매에 대해서는 그 기능성 테스트를 통과한 진화복을 구입하면 되는데 이미 나가 있는, 이미 갖고 있는 진화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현실적으로 재구매해서 보급할 계획입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지금 파악해 보니까 23년 말 이후에 그 기능성이 붙은 게 619벌 있는데……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합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것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협의 중이라기보다는 행안부랑 기재부랑 당장 협의를 해서요, 바로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진화복 구입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복제 지침…… 지적이 있으셔서요.

○문대림 위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산불진화복 제조사 중 푸른산업 기억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행정처분 받았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대림 위원 행정처분 받았는데 이 회사는 다른 회사 완제품을 납품받아 가지고 태그(tag)만, 태그같이 한 거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대림 위원 그 과정에 어쨌든 산림청의 행정적 과실 있다, 없다?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가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철저히 점검해서 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해 가지고 엄중 처벌하시고.

또한 이미 구입된 진화복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헬기 예산, 헬기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200억, 25년 예산이.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이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 예산이 감소된 것은 헬기 구입할 때 3년간 나눠서 합니다. 3년간 나눠서 하는데 할부율, 연부율이 첫해에 10%, 두 번째 해 40%인데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지금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진화복에 관한 문제도 그렇지만 장비 관련 예산, 특히 헬기까지 해서 이번 추경 심의 시에 적극적인 태도를 좀 보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임호선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전문적 교육시스템이 없다, 수년째 노력하고 있다…… 몇 년째 노력만 하시는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

○문대림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이 직접 증언한 바에 의하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신규 채용자가 정식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필요한 기술은 선배들에게 구두로 전수받고 있다, 이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일부 맞는 말씀도 있고요.

○문대림 위원 미국의 경우에 NIFC 이런 전문 훈련시설과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대림 위원 우리는 수년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지요.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27년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고용형태에 관한 부분도 종합적인 대안

을 세워 가지고요,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아까 청장님께서 얘기하는 중에 군 수송기 활용 관련해서 스무 차례 이상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대림 위원 그게 잘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군 작전이라든지 이런 데 차질이 우려돼서, 그리고 또……

○문대림 위원 군 작전 차질의 문제입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그것하고 또 처음……

○문대림 위원 국방개혁 2.0에 보면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군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가계획상에, 국방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무 차례 정도 협의를 했는데 왜 C-130에 대한 접근이 전혀 안 이루어졌었는지……

스무 차례 협상은 언제쯤 했었습니까, 협의는?

○산림청장 임상섭 그때 2022년 울진·삼척 대형 산불 나고 나서부터, 이후부터 계속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때 해서 타결이 됐다면 군 수송기 활용이 이번 산불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작년에 그 관련된 예산 80억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협의가 안 돼서……

○문대림 위원 포괄안보 개념에 대해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포괄안보?

○산림청장 임상섭 못 들어 봤습니다, 포괄안보.

○문대림 위원 포괄안보 개념, 국방개혁 2.0을 한번 보시고요. 군이 이런 초국가적·비군사적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안보 개념 차원에서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국방부랑 협의해서 가지고……

1만t 이상의 물을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확도의 문제는 조금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운용되는 헬기들도 정확도의 문제는 항상 제기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통합방위법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림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괄안보 개념에서 산불과 관련, 재난 대응에 군과 함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수송기 문제는 협의가 잘 안 됐었지만 이번 산불 때 국방부에서 헬기 50여 대, 최대한 거의 동원해 주셨고요. 군 장병 인력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해서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오후질의 때 찾아가는 산불교육, 군에 대한 찾아가는 산불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하려는데 서삼석 위원이 인상 쓰고 있어 가지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예기치 못한 산불 피해로 인한 피해자분들께 애도 또 유가족께는 위로, 관계자분들께는 격려, 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많은 후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관련된 얘기들이 주가 되고 있는데 현황에 대한 건설적 얘기는 어느 정도 다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서삼석 위원 영암에서 재발된 구제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정부 지원대책도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장관님하고 청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어요. 그렇지요? 70% 이상의 산림을 차지하고 있는 임목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림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63%가 산림 면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삼석 위원 63% 산림 면적에 임목이 차지하는 부분은 몇 퍼센트나 되냐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임목요?

○서삼석 위원 예.

○산림청장 임상섭 우리나라는 대부분 임목이 성립되어 있는 산림입니다. 미임목지가 거의 없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데 재해보험에 임목이 빠져 있다라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더 언급을 하지는 않겠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현실이니까 저는 반드시 이게 보상품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도입만 검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재해보험과 관련된 시스템 무용지물론도 여기서 얘기해 봐야 불난 집 부채질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할 테니까 장관님하고 청장님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것도 불이에요, 안 한 것도. 여러분들이 불 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년의 대형 산불과 관련된 책임은 불을 낸 사람에 있겠지만 그것을 꺼야 할 위치에 있는 관계기관들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이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기관은 저는 재정 당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야 위원님들이 이러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품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산림청도 재정 당국에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안에 많은 예산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숫자를 열거하려다 보니까 내가 열불이 나서 지금 그 숫자를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대형 산불이 나 가지고 장기간 진화하는 데 애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재정 당국 책임져야 됩니다. 헌 칼 휘두르듯이 칼질만 해대는데 일차적으로 나는 재정 당국이 이번 대형 산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정부하에서 직을 걸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림청장도 또 관계된다면 농림부장관도 그 혼한 직을 걸고라도 차제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통감한다고 제가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진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재정 당국 칼질에 힘없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애를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후진국형 대응시스템이다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일부 공감할 하기는 하는데 너무 무기력했지 않나…… 산림청이 수립하고 있는 산불방지대책, 장기대응계획들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너무 형식적이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하는 그런 심정으로 전향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4월 중에 정부 차원에서 산불종합대책을 발표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기왕 불은 났지만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목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식목일이라는 날짜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4월 5일 날 나무도 안 심는 식목일을 그대로 놓고만 볼 것인가……

나는 의미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현실적으로 나무도 심지만 심어 놓은 나무도 가꾸어야 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 자리에서 논의했던 기후변화와 의 관계 이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과거 식목일과 같은 그런 날짜를 범

정기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정부입법을 한번 발의해 볼 의사가 있으신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삼석 위원 그 계획을 저희 사무실로 한번 보내 주시면 저희도 안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만들어 봅시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대형 산불을 보고 참 마음이 무겁고요 참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2022년의 울진·삼척 산불, 대형 산불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외국이긴 하지만 LA 산불, 대형 산불도 있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의식이 충분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히 행정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뭘 준비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매우 안타깝고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긴 하지만 이 지적들이 단순히 올해에만 지적된 게 아니고요, 그중의 몇 가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많은 가지는 아마 21대 때 농해수위 국정감사나 상임위에서 산불이 일어날 때마다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맞으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나아진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정책이나 제도가 후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산불은, 지금이 4월 초·중순인데요. 사실은 산림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 중 4~5월 중에 발생하는 산불이 59%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4~5월 달에 기상이 계속 건조하고 이렇게 바람이 강해지면 대형 산불이 또다시 발화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게요. 산림청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나 시민분들께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맞고요. 또 그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맨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청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대책이 너무 간단간단하게, 간편간편하게 있어서 산림청으로서, 주무 부처로서 저런 입장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최근 언론에는 종합 대응 대책으로 해서 그 권한을 다른 데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왜 그런 얘기를 산림청에서 들어야 되는 겁니까? 농림부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심도 있게 국민의…… 저희가 있는 부분들이 저희 행정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 거고 안위를 위해서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전향적으로 뭘 주장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니,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의성발 경북 산불이 지난 2022년에 발생한 울진·삼척보다 피해가 3배고요 또 피해 인원은 6배에 달하는 최악의 산불입니다. 그런데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장비와 인력은 3년 전보다, 반토막 수준으로 오히려 후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때 당시에 동시다발 산불, 산청·하동에도 있었고요. 울주에도 있었고, 여러 지역에 분산되다 보니까 경북 의성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니, 의성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산불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데, 산불 헬기에 대한 활용도도 현격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조종사 인력 운용이라든지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산림청의 산림 헬기 도입·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정 당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산림청이라든지 농림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력사업이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든 그것을 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적극성이 없으면 맨날 똑같은 지적을 하고 그 권한 자체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동의하고요.

위원님, 산불 진화에 관련된 전문성은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산림청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도 자꾸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좀 그런데 산림청에서 더 크게, 더 정확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위원들이 안 도와줘서 기능이 안 되시는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아니……

○송옥주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안 도와드린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산불진화대에 관련돼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중 특수진화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국정감사 때 직접 진화대원까지 모셔서 국감에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 그때 계셨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있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체계 개선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후속조치가 있었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하여튼 저희들이 결과론적으로는 현재 반영이 많이 안 돼 있지만 월 한 번씩은 제가 직접 진화대원, 그 해당되는 간부들하고 얘기를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계속 듣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산불 예보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니까 20년 전에 전국에 있는 산불 피해지역 126개소를 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직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는 맞지를 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산불 예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일일 산불 위험예보와는 달리 산불확산예보라든지 대형 산불 예보가 산불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 현장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현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과거에는, 이번 대형 산불 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잘 맞았다고, 한 80% 이상 맞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의성 관련된 산불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기후 상황 때문에 강풍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시키는데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송옥주 위원** 기후변화나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산림청에서 임도와 관련된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임도와 관련된 찬반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산림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해명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임도는 환경 관련된 분야에서 산림 생태계 훼손이라든지 환경 훼손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또 산사태 우려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아주 영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산에 있는 임도가 산불 진화라든지 또 예방이라든지 또 임산물 생산이라든지 목재 생산이라든지 또 숲길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그 기능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도,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한 6배 이상 정도 되고 독일, 오스트리아, 선진국들도 10배 이상의 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했듯이 산림청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산불 진화에 참여하셨던 시장·군수님들이나 광역지자체장님들도 다 같이 절실하게 공감하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임업인들도 임도가 없어서 도저히 산을 관리하기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림이 63%인 산악국가에서 산을 관리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인 임도가 이렇게 1ha당 4m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대신 튼튼하게, 환경 문제 최소화하면서

짓는 방법을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임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서천호 위원 우선 여러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대표적인 문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현장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까지 계속해서 잔불이 남아 있고 지금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대피 주민들은 집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부처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피해 현장 조사도 지금 현재 진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주민들이 여기저기에서 불평이 쏟아집니다. 하루빨리 피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 직원들이 지금 국회에 불려 나와서 상임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 시국에 뭐 하고 계시는 건지,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국회에 앉아서 산림청 직원 불려서 회의를 할 게 아니라 산불 현장에 나와서 직접 하시든지 피해 현장 보고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뒤의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피해 주민들의 절실한 마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맞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장에 7일간 있다가 어제저녁에 올라왔는데 현장 상황을 보면 그냥 쑥대밭이고 폐허입니다, 폐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시기적으로 맞나 하는 부분이고, 원인을 따지고 대책을 주문하고 하는 부분은 추후 해도 늦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고 복구가 절실한 부분인데 그 인력이 이 현장에, 국회에 와서 어찌 보면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미 개최된 위원회 같으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종료를 해서 현장으로 정부 인력들이 갈 수 있도록 다만 1시간이라도 일찍 정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께서 합의를 하셔서 또 위원장님께서 재가를 하셔서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오늘 회의를 어렵게 잡은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산불 현장에서 희생되신 분들 애도하고 또 부상을 입으신 분들 빠른 시간 내에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진화를 했던 진화대원들, 지자체, 소방, 경찰,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또 헬기 조종사, 군인까지도, 현장에서 정말 헌신했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불의 특징은 제가 현장에서 보면 주간에 헬기로 대부분 진화를 했다가 또 야간에 헬기가 투입이 안 되니까 재발화하고 또 화선이 확대됐다가 다시 주간에 헬기로 진화

하고 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청장님, 이 이유를 돌풍이나 강풍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현장이 너무 처참해요. 그리고 이게 수일간 반복이 됐다는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휘체계나 헬기를 포함해서 장비 운용 매뉴얼에 좀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에서 지금 495개소에 대해서 산악기상관측망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1분 단위로 여러 자료를 전송하고 있는데 단순한 관측을 넘어서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고도화된 그런 장비 보완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겠지만 이 역시 산림청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천호 위원 그 부분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지난 1월 20일 날 국립산림과학원에서—두 달 전입니다—산불 발생 위험 예측 결과 보고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경북 의성·안동·청송을 포함한 영남권 산불 고위험 지역을, 시기와 지역을 적시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은 됐는데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2023년 ‘봄철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백서’를 산림청에서 발간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번 대형 산불에서 필요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다 적시돼 있어요. 예컨대 진화 헬기 확충이 지지부진하다, 대형 헬기가 필요하다, 야간 운항 헬기가 더 보완돼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지금 현재 435명이지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 인원을 2500명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침엽수 위주로 돼 있는 산림구조 개선도 해야 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보면 지금 현재 대피 매뉴얼이 재난문자로 가는데 재난문자를 우리 지역에서 많이, 특히 노령층에서 받다 보니까 이것은 거의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든지 대피방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그제, 이틀 전에 하동 산불 또 재확산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거기 보면 임도가 있어요. 임도가 있었는데 야간에 그 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층부는 다 났는데 임도를 기준으로 하층부는 발화가 전개가, 확전이 안 됐습니다. 임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분이 실증이 된 겁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천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임도는 폭이 3m 이하로 돼 있는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산불 진화용은 3.5m에서 5m고요, 일반적인 간선임도는 3m 정도 폭으로 합니다.

○**서천호 위원** 이것은 산림청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는 하겠지만 환경청이라든지 여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임도 부분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검토하시고, 그 역시 개선방안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불 확산 지연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리타던트라고.

○**서천호 위원** 예. 이 부분은 친환경 무독성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 사안인데 왜 이렇게 물량이 부족하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첫 번째는 가격이 좀 비싸고요. 리타던트를 뿌리면 그 이후에 물을 뿌리는 게 제한이 됩니다, 씻겨져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꼭 지켜야 될 때, 인가라든지 시설물 위주에만 뿌려 놓고요. 뿌려 놓을 때도 한 번 뿌리면 추가로 물을 뿌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효과는 물보다는 삼사 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상 부족, 예산상 문제라 그러면 국회를 통해서도 예산이 추후 확보가 되는 쪽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천호 위원** 그다음에 산불 진화의 특성상 보면, 사실 산악의 접근성 부분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인데 특히 잔불은 지금 소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 보면 산악 진화대와 소방에서 진화하고 있는데 소방차 급수지가 사실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천호 위원**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농업용수를 쓰는 곳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농업용수를 산불 진화, 소방차 급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병행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소방차 급수를 하는 시스템이 주택가에 오든지 시설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실제로 진화를 하고 또 급수하느라고 한 시간 정도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니면 급수차가 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산악 특성상 급수차와 소방차가 경유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를 하고도 30분이 지나야 또다시 재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급수 부분도,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산림청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수지 쪽 검토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예.

제가 1분만 하고 오후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각 부처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예를 들어서 현재 경북 지역 같은, 과수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수 열매 피해가 문제가 아니고 과수나무 자체를 현재 뽑아내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집니다. 산정도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데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피해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야 되고 또 법안이라든지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각 부처에서 같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정말 이 피해 보신 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어기구** 예, 이원택 간사님.

○**이원택 위원** 오늘 상임위 관련해서 사실 정희용 간사랑 계속 협의했었는데요.

저도 안동과 의성·청송·영양에 총 3일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있었고요. 불이 있을 때는 진화하는 것 또 대피소 중심으로 현장을 봤었는데 어제랑 그 전 행위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관계자들 내려오는데 자기네들 하는 말 또 하고 또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빨리 신속하게, 예를 든다면 조사 과정을 지자체에서 지금 수요조사, NDMS 조사하고 있는데 중앙부처가 내려와서 두 세 달 걸리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패스트트랙 해 달라, 빨리 처리해 달라. 특별법이든 빨리 법안 개정해서 보상을 현실화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빨리 국회에서 따져 보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런 요구가 현장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회가 현재의 정부의 법과 지침과 매뉴얼대로 하면 아마 경북도민들 실망감이 엄청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보상이 현실적으로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고 바꿔 갈 건지가 국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정당과 국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의 어떤 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서 질의응답하고 이런 것을 총 취합해서, 각 당의 산불특위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또, 각 상임위에서 나온 것을 취합·정리해서 입법 상황으로 가고 예산 대책으로 가고 추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저도 본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님 소개한 민원인 심정 한편으로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산불과 관련해서 대책을 한다면 사전에 예방활동 제대로 해 놓고 또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대응을 신속하게 이렇게 하고 또 발화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복구·피해보상 이것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금번 의성발 경북 산불 전체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방이 부족하다, 또 진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피해가 발생

해서 복구와 피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현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진화 과정이 어느 정도 됐고 이제는 복구 작업 또 피해보상과 관련된 기준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 과정에 상임위를 개최해 가지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진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복구와 피해보상의 기준, 정부의 보상 기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시점 이어서 이원택 간사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점에 이런 논의 또 상임위의 운영 이것은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칫 국민들에게 국회가 갑질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 저는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 말씀과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작금의 헌법 재판관 임용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의 역할이나 자세 여기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현재 결정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 최상목 대행에게 건의하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배석 위원도 참석해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아닌 두 분 임명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정도로 국무위원들이 정상적인…… 국민들 눈높이에 보면 맞지 않는 행동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권한대행의 보충적, 현상 유지적 기능을 벗어난 역할에 대해서 헌법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강도형 장관께서는 인사권이어서 아마 얘기 안 했다는 얘기고, 송미령 장관께서는 아무 발언을 안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안 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뭐라고 발표를 했다면 ‘법적 검토를 거친 뒤에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국무위원들은 핫바지입니까? 의견을 뭐를 물어봤고 어떤 검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되면 그 내용이 올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들…… 저는 이번의 내란사태가 발발한 내용 그 자체도 국무위원들도 방조 혐의가 짙다 이렇게 봅니다. 책임이 크다.

저는 지금 대행 체제에서 선거 관리하는 체제가 현재 국무위원 체제로 유지되는 것 자체도 염려스러워요, 사실.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선거 관리라든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특히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윤준병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산불과 관련된 내용은 발화 원인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대응하는 자세나 역할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정

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인재다 이렇게 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 2022년도 울진-삼척 대형 산불 난 이후에 백서 만들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윤준병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백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하고 개선책 마련 해서 차질 없이 집행해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백서 만드는 거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백서 만들었는데 이행이 됐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일부 이행된 것도 있고 일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일부 이행이 됐다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도 이행이 안 됐어요.

가장 중요하게 산불을 진화하는 장비인 산불헬기, 여러분들이 대형 헬기 연 2대씩 늘려 가지고 2027년까지 목표치를 다 달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윤준병 위원 못 했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런데 위원님, 헬기 문제는요 도입하는 데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약 중인 것도 있고……

○윤준병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 내용에 원래 연 2대씩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2대씩 늘리고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윤준병 위원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내용을 반성해서 재정 당국하고 제대로 협의해서 실천해 내야지요.

예를 들면 2022년 산불 나 가지고 그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산림청장이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백서에다가 이러이런 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직이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 남용됩니다만 산림청장의 직을 걸고 요청을 해야지요. 이번에 그 내용을 담보하려면 예비비라는 수단도 있고 추경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추경 얼마나 요청했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지적하신……

○윤준병 위원 예전에 백서에 들어 있는 계획이 실천되는 수준의 예산이 지금 요청됐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 내용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협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기재부를 설득해 내려면, 물론 기재부도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실천해 내려면 국민들께 공개하고, 이러이런 우리가 부족한 내용 이번에 반영하려고 한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공개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재부가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수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 있냐, 몰라. 협의하고 있다 그러고 그냥 얼버무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이번 산불 나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그것을 조치계획에 정부가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도 똑같이 대책에,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인재라고 그러니까. 책임져야지요.

이번 추정하는 과정에 그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은 오후에 하기로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박덕흠 위원님 제안대로 농촌진흥청장님, 농협중앙회장님, 산림조합중앙회장님은 오후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오전 질의에 산불 피해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명복도 빌고 또 위로도 드리고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저도 같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산불 진화 과정의 문제 또 대피 과정이 적절했는지 또 인력과 장비는 충분했는지 또 복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게 돼 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원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PPT에 보면 확산 대응 산불 1단계·2단계·3단계하고 산불 4단계가 ‘국가 총력대응’ 해서 4단계로 구분돼 있잖아요. 저는 이 매뉴얼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소극적이고 방어적 대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PPT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기 의성 상황입니다. 사실 3월 22일 12시 50분, 1보가 됐지요. 10보에 가 보면 23일 아침 7시입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원택 위원 그다음에 11보에 가면 9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확산 속도가 사실 6보에 47에서 10보에 426, 11보에 가서 400으로 확 올라갑니다. 보셨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원택 위원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 체계, 광역으로 대응하는 체계 그다음에 산림청이 대응하는 체계 또 국가 총력 단계로 돼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하면, 산불은 사실 풍속이라든가 강풍을 예상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조기에 대응 체계가 아니다 저는 보여줍니다, 이번 산불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매뉴얼과 단계대로 산림청이나 광역시도가 지휘했겠지만 사실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4단계로 돼 있는 것을 2단계로 압축 정리해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기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그때 상황 말씀드리면 보여 주신 PPT 자료가 다 사실이고요.

그때 사실 저는 산청 산불에, 경남지사가 지휘하는 데 미리 가 있었습니다, 1000ha 되기 전에. 왜 그리냐면 산청이 먼저 발생했고 100~1000ha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가 있었는데 경북 의성이 나중에 발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청에 있다가 바로 의성으로 옮긴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장이 의성에 가기 전에 진화율이 2%, 3% 정도였는데 가서 51%로 올랐는데, 이것은 산림청이 잘해서라는 그런 얘기보다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거기 보면 10보하고 11보 사이가 사실 완전히 급격히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게 대응 1단계·2단계·3단계·4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 산불은 초기에 조금은 과잉할 정도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초기 진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상황에서 강풍이 또 동서남북 어디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조건에서…… 그런 점에서 이 매뉴얼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 광역시도의 인력과 장비 또 산림청의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응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기초에서 좀 하다가 또 광역 하다가 또 예상치 못한 강풍이 불어서 완전히 손을 놓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건 또 돌풍이, 강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돌풍이 있었던 상황이지요. 여기 최대 돌풍이 미터 퍼 세크가 25m/s까지 나왔는데 돌풍에 대한 대응 훈련, 어떤 대응 체계와 훈련 체계가 지금 부족해 보인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헬기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넘겨 주시겠습니까?

대피 과정입니다. 대피 과정을 보면 의성에서 22일 날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영덕이 26일 날 1보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4일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겠습니까?

다음 PPT 넘겨 주시면 이렇게 의성에서 발생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가게 되면 사실

강풍을 예상했을 때 대피 발령을 내야 되는데 여기 영덕 같은 경우는 최초 경고 문자는 3시간 후에 나온 겁니다. 그것도 26일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의성에서 부채살 모양의 최초 발화가 됐을 때, 산불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지자체들이 22일 또는 23일부터 대피 명령이나 문자가 발송되는 체제로 가야 되는 건데 이번에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영덕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응이 너무 늦은 사례입니다. 여기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피 과정에서의 발령이나 문자 안내 또 조치들이 좀 미흡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영덕에서 10명 이상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사실?

또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시군 단위의 통합 지휘 체계에서 전체 경북 7개 시군 단위의 통합 지휘 체계로 전환된 것이 26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원택 위원 그래서 아까 부채꼴 모양을 놓고 강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까 매뉴얼도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지휘 체계 전환도 그런 걸 감안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22·23·24·25 지나서 26일 날 전환된 거거든요. 이것도 좀 선제적인 대응 체계에서는 부족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거기 잠깐만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의성·안동에서 영양까지 가는 데 한 8시간 만에 이렇게 확산이 됐고요. 그런데 그것은 확산 예측 모델을 돌리더라도 관련된 풍속하고 풍량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풍량은 어느 정도 맞는데 풍속은 초속 27m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그 데이터를 예측해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그리고 대피 문자를 이렇게 좀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확산되는 것을 측정할 때 주간엔 헬기가 떠서 영상을 봤고요. 또 지상 인력들이 하고 또 야간에는 드론을 띄워 가지고 화선을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거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때는 강풍으로 인해서 드론도 못 띄우고 헬리콥터도, 진화 헬기도 못 뜨고 지상 진화 인력들도 사실은 어려워서…… 그리고 또 전기선, 통신선이 두절돼 가지고 저희들이 몇 시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상황 파악하는데.

○이원택 위원 청장님, 제가 그런 실무적인 여건상의 어려움은 알겠는데 21년 산불, 22년 산불 보면요 부채꼴 모양으로 산불이 다 결국은 그렇게 갔어요. 아시잖아요, 동해 산불도 마찬가지로 올진 산불도 마찬가지로 다 부채꼴 모양으로 그렇게 강풍에 따라서 간 거거든요. 그 경험이, 최소한 세 차례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측을 하셨어야지요. 그거는 예측을 해서 그 방향선상에 있는 지자체에 빨리 대피 조치라든가 명령

이 하달됐어야 맞지요. 그런데 22일, 23일, 24일 이렇게 과정을 거쳤는데 26일 날 1보가 영덕에 뜬 건 늦은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산림청장 임상섭**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불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 내에 영덕까지 갈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전혀 확보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지, 제가 그게 잘못됐다거나 말씀 지적하신 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 통신 두절이라든가 풍속의 데이터값이 없다 이런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사실 강풍이 불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의 사례로 놓고 보더라도 부채꼴 모양으로 그 방향으로 산불이 다 갔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결국 다 났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저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덕도 마찬가지로 영양도 마찬가지로 청송도 그 과정 선상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나머지는 또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경북·경남 산불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 또 그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두 분 헬기 조종사분들께도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소중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수많은 이재민분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도 현장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산림청을 비롯한 경북도청 또 지자체 공무원분들 또 이재민분들을 위해서 애써 주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산불 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임상섭 청장님을 비롯한 산림청 관계자분들, 소방청 관계자분들, 지자체 공무원분들 또 의용소방대분들, 산불진화대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원인을 밝혀서 재발방지를 하는 그런 자리도 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산불주의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5월……

○**산림청장 임상섭** 15일까지입니다.

○**정희용 위원** 5월 15일까지. 지금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서 우리가 주의하고 예방

하고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산불을 보면서 헬기 문제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임도가 충분히 돼 있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산불 진화 인력들을 좀 더 훈련하고 좀 더 고급화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또 AI나 소방 드론처럼 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보강했으면 어땠을까, 또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소방 진화 차량들을 충분히 활용할 여건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의성에서 산불이 며칠간 있다가 확산된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의성은 주불 진화 완료 때까지 총 149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의성에서 한 3일 정도 불이 있다가 강풍이 불면서……

○산림청장 임상섭 24일 오후부터……

○정희용 위원 안동으로 간 불이 청송으로 내려오고 영양으로 해서 영덕으로 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의성에서 불이 오랫동안 타고 있을 때 산불을 그때 잡았으면, 바람 불기 전에 잡았으면 확산을 안 시키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선 존경하는 이원택 간사님 질의의 취지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이 퍼져나가는 게 예상이 되는데 빨리 대피신호를 못 보낸 게 아쉽다, 그러면 이면에 의성에서 불을 꺾으면 빨리 대응이 됐지 않을까, 그러면 산불 대응체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청장님처럼 산불 진화 경험이 많으신 분께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 체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규모에 따라서 기초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또 확산이 되면 광역단체장 그다음 되면 산림청장님 이렇게 지휘권이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 산불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불이 나면 빠르게 산림청에서 개입을 해서 책임을 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청이 아무래도 산불 진화와 관련된 경험이나 노하우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한정된 진화 자원하고 인력을 가지고는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려면 굉장히 보강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성 확산되는 거를 초기에 못 막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22일 날 전국에 산불이 동시에 29건이 났습니다. 29건이 나서 헬기라든지 진화 자원을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몰아 가지고 집약적으로 끄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 경험들 있으시겠지만 대형 산불은 전국 단위로 한 군데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형 산불이 거의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동시에 납니다. 그것은 기후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산림청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진화를, 지금 우리나라 산불이 연평균 한 500건 정도가 납니다. 500건 정도가 나는데 대부분은 시장·군수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잘 정리가 되는데 대형으로 확산이 될 때, 특히 대형으로 확산되는 시기는 기후적인 요건이라든지

지역적인 요건들이 강풍이라든지 이런 게 겹해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자원, 진화 자원량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과다할 정도로 확보가 돼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지금도 건조주의보가 계속 내려지고 있고 산불주의 기간이기 때문에 돌이켜봐서 빨리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체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자원 확보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결산 자료입니다. 작년 결산 자료인데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한 추산을 통해서 헬기 임차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산출할 것’ 이렇게 지적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임차 헬기 예산이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정희용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의 이 세 분 위원님들이 자리에 다 계신데, ‘적정 산출할 것’이라고 그때 지적을 받았는데, ‘적정 수준을 산출할 것’ 거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임차 헬기는 두 가지인데 산림청에서 직접 임차하는 헬기가 있고요, 그거는 러시아산 헬기가 지금 8대 정도가 다운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하는 헬기도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협의했는데 잘 안 됐고 산림청에서 직접 임차하는 예산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보자라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헬기 자원들을. 또 올해 50대 정도 군에서 헬기 지원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희용 위원 당연히 국가 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써야 되고 합시다마는 적정 수준으로 산출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산불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잘 받으셔서 가지고 사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산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헬기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상으로 주질의가 끝났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병진 위원 5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청장님, 오전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올렸는데, 129건을 형사공판을 했지만 결국은 한 5.8%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구약식이라든지 기소중지, 혐의 없음 이렇게 끝납니다. 아까 답변 와중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기후변화

로 인해서 확산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만사가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인 중의 하나가 인재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현실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요국 방화범에 대한 처벌 사례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북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고의적인 산림방화범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선고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동일한 형량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과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형량보다는 배상청구 이런 쪽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인명도 중요하지만 배상액을 좀 과하게 워닝(warning)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평소에 말이지요, 대대적인 알리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산림방화범에게 훼손된 산림 복구라든지 진화 비용 배상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 강화와 함께 배상청구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재난방지법 발의해 주셔서 제정이 돼서 시행 앞두고 있는 거기에 복구 비용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요. 저도 입법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70만ha 이상 피해를 입힌 과실범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든지 기본 산림 관련 기관에 3년 이상 취업제한 명령한다든지 이런 법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잘 협의해서 원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병진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님, 협상의 기본원칙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협상할 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먼저 신뢰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윈윈 전략 하에서 치밀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또 협상 파트너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또 내 패를 함부로 보여 주면 안 되고.

협상 파트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관님이 외국 방문하면 외국도 장관급이 나오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또 타국과 협의할 때는 국장님이 가서 협의를 합니다.

평택항은 전국의 31개 국제 항만 중에 5위에 포지셔닝(positioning)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1위 부산, 2위 여수·광양, 4위에 인천, 5위에 평택이고. 11년간 자동차 물동량은 넘버원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작년만 해도 1억 1700만t 물동량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안타깝지만…… 그릇이 큰 용기에는 물을 많이 담아요, 적게 담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많이 담지요.

○이병진 위원 많이 담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 지역 해양수산청은 그릇이 너무 작다. 예를 들어서 경기 자유구역청장은 지금 1급이에요. 그리고 충남도 관련 국장은 3급이고 경기도 국장도 3급이고 그다음에 평택 세관장도 3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 해양수산청은 상당히 낮은 4급이에요. 대화와 협상이 되겠어요, 업무 협조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고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대로 된 협의가 되겠어요, 업무 협의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래서 국장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문해서 힘을 좀 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벌써 2000억 들어간 신여객터미널도 지금 가동이 안 돼 있어요. 바쁜 와중에도 두 번 방문해 주셔서 애정을 표시해 줬지만 제대로 된 개소식도 못 하고 해양수산청의 권위와 실질적인 역량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해서 새롭게 좀 봐 달라, 나급으로 이렇게.

해양수산청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인지하고 있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추진을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5대 국책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발을 같이 맞춰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상욱 위원 저는 이번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산림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는 아까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조기 진화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불재난대응체계에 대해서 그것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고 의견들이 각기 좀 다 다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미애 위원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이게 소방청과 산림청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점검을 제대로 못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을 손을 봐야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소방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소방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얘기가 될 텐데 청장님은 지속적으로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 현장에서 느끼는 건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 논의가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난정보학회에서 나와 있는 산불사고 현황과 대응체계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라고 하는 연구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 볼 테니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미애 위원 초동대응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 최초 신고부터 진압까지 소방이 주도하는데 완전 진압까지 소방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산림청 헬기에 의한 공중 작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불 진화 작전은 소방청이 해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다. 산림청 주무부서와 소방은 지원부서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산림보호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산림보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이 각각 역할이 달라서 이게 현실과 법의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 경험이 없는 지자체의 장이 1단계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단계로 가면 100ha가 넘어가면 시도지사한테 지휘권이 있는 거고 1000ha가 넘어가면 산림청장한테 있는데 2단계에서 현장 경험이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산불 진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공조가 부족하다, 정보 공유와 지휘 통합이 미비하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지휘권의 경우 산불 진화 현장 지휘에 관한 규정은 있는데 장비의 구체적인 동원 기준 그리고 절차가 없어서 강제 조치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현장 지휘의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게 마지막 것하고 끝에서 두 번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은 외청으로서 굉장히 기구가 작습니다. 산불 진화에 특화된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기구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반면에 소방청은 똑같은 외청이기는 하지만 소방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방청 입장에서는 산림청장의 이야기를, 어떤 자원을 동원하거나 명령을 내리고 지휘체계를 발동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실제로 소방관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감정적으로 과거에는 내 눈앞에 산불이 보이면 쫓아 올라가서 호스를 짹 펴고 불을 꺾는데 2015년 이후에 시간이 점점점점 지나면서 ‘저것은 산림청의 권한인데……’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러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심정적으로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산불이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 단독 지휘체계가 아니라 소방청과 산림청의 공조체제로 지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견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앞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마지막 것하고 마지막 것 두 번째 말씀드리면 현장 지휘,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소방은 산림, 산불에 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

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보호법에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재난 기본법에 보면 산림청장이 산불재난 주관기관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공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산불현장 지휘본부가 설치가 되면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운영을 할 때 거기에, 그 하부에 소방관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소방본부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고, 물론 거기에 산림청도 시도지사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항공기, 항공 진압 안 하고 지상 진압하는 차원에서 거기서도 시도지사가 할 때 산림청도 들어가 있고 소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1000ha가 되거나 2개의 시도가 합쳐져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1개의 시도지사가 그거를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우니, 자원을 동원하기 힘들니 중앙부처의 장인 산림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고…… 현장에서, 지휘본부에서 제가 현장지휘본부장을 할 때 산불이 이원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예측이 되고 상황실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현장본부에 다 줍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루에 세 차례 정도 상황점검회의를 합니다. 소방·군·경찰 다 합쳐 가지고 텐트 안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그 정보를 전달을 해 주고 소방에서는 그 방향의 인명이나 시설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맡아 가지고 해 달라는 협조체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외에 야간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지상 진화를 하거나 하는 거는 산림청의 특수진화대나 공중진화대원들이 거의 맡아서 해 갖고, 소방에서 일부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헬기 자원 같은 것도 총괄적으로 산림청에서 자원을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장하고 소방청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산림청하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관서는 현장에서는 시도지사의 지휘라든지 그런 데 협의가 잘되고 있고 나름대로의 산불 진화나 경험이나 역량 같은 거는, 정보 분석이나 이런 거는 산림청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잘하는 시설 피해라든지 인명 대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다가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산불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광역적인 거기 때문에 도시 산불처럼 한 군데서 딱 맡아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재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분야에서 맡은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공조체계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나 같은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만약에 더 큰 권한이라든지 더 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자원 확보라든지 법령 제·개정이란지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번 산불을 통해서 많은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신데, 산불 대응의 주무부처로서 산림청이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번 체제를 잘 만들어 보세요.

지금 혹자는 컨트롤타워를 소방청에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잘 지자체와 소방청과 산림청이 어떻게 가져가야 정말 산불 지휘체계에 혼선을 안 주고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가지고 가는지 법이면 법, 제도면 제도, 예산을 확실하게 밀고 가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청장님, 아셨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업무에 전념하셔야 되는데……

산림청장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응체계와 관련해서 산불특수진화대 있잖아요. 지금 직급체계가 안 갖춰져 있지요, 소방처럼?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지금 다 그냥 정규직으로……

○임호선 위원 만 돼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직급체계는 없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그 직급체계를 뒤서 전문성에 따른, 그게 결국은 처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전문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호선 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운영도, 제가 볼 때는 몇십 명으로 지방산림청에다 쪼개 놓는 게 아니라 점점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저의 경험으로 보면 최소한 100명 이상은 돼야만 어떤 나름대로의 조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지금 40명, 50명씩 이렇게 나뉘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또 직급체계도 갖춰 가지고 소방처럼 유사한 직급체계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에 따르는 처우도 마련돼야 그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보다 숙련도를 쌓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꼭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어제 MBC 보도 보셨겠습니까만 이제 집중호우로 또 걱정할 때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호선 위원 또 국지성 호우가 기상이변의 하나인데, 산사태의 위험에 사실 또 노출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쭉,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많게는 200배 이상 산불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산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지역이라든지 민가 주변에 산불로 인한 산사태 우려 지역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

구……

○임호선 위원 그런데 위험지도 현행화는 지금 사실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2월 달에 현행화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산불이 끝난 시점 적어도 한 5월쯤에 현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산사태위험지도가 1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번에 산불 때문에 여러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키고요.

○임호선 위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게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업데이트를 5월 말까지는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한전에서 송전탑 같은 데다가 거기에다 기상 관련된 또 산불이 든지 강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구축해 놓고 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기상청하고 한전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놓고 있나요, 산림청에서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송전탑에 설치된 감시 CCTV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임호선 위원 그걸 직접 받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저희들이 통합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호선 위원 그러면 집중호우도 정보가 모니터링되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은 기상정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단 시각, CCTV처럼 보는 정보만 되어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지성 호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시간으로 강우량이 체킹이 되면서 그에 따른 위험도가 실시간으로 분석이 됐을 때 문제는 지금 긴급하게 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급 상황에 대피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제가 볼 때 짧게는 한 석 달, 두 달 내에 그렇지요, 두세 달 내에 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대비 태세를 통해서 주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려서……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기상청하고 한전하고 같이 강우를 실시간으로 산림청에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것을 갖춰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여러 가지 많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임호선 위원 아무래도 우리 농업인분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생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제 인삼협회 회장님하고 뵈어요. 그런데 다른…… 예컨대 지금 인삼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차광막이, 해가림 시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더라고요. 3만 평 이

상 피해를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철거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철거비요?

○**임호선 위원** 예, 철거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주문을 하시냐 하면 이것이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잠깐만……

이게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사실은 이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일손도 부족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하루가 다르게 햇볕 양이 늘고 있잖아요. 이게 하루가 늦어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영향분석을 한단데 화재가 인삼 생육, 그러니까 땅속에서 인삼 싹이 올라오잖아요. 이걸 하루라도 빨리 차광막을 설치해 주지 않으면 바로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하루가 급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삼농가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산림청장님께 산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던데 저도 21대 때부터 계속해서 산불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결국은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하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인데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보고를 하셨지만 임도 확충돼야 되고 또 산불 진화 헬기가 대형 위주로 도입되고 야간 진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주철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임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가 4.3에 불과해서 독일 54, 오스트리아 50.5, 일본의 24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고 열악하거든요. 국가임도, 지방임도는…… 지방임도 중에서도 간선임도, 산불임도는 국비 지원이 되던데 작업임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방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것도 좀 지원할 수 있게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사유림에 대한 임도 낼 때 본인이 그쪽에,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지금 못 내게 돼 있는데, 정말 저희가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같으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주철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상 원칙에 비추어서도 소유권 제한이 불가피하

다고 봐요. 그래서 동의 없이 산불진화임도를 낼 수 있는 이런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적해 주신 의견 동의드리고요. 윤준병 의원님 발의하신 임도 관련 된 법률안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사항이 담겨져 있어서……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동의 없이도, 물론 이걸 보상하면 안 되고요. 보상해 주면 끝이 없거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평도 안 맞고…… 저는 하여튼간 이게 간선임도나 산불진화임도는 산주의 동의가 없이도 임도를 낼 수 있는 이런 법적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헬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계셨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형헬기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산불이 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10t급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대형헬기 5대하고 5t급 2대를 임차해서 썼는데 올해는 왜 이게 안 된 겁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일단 24년도에 산불 빈도가 기후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러시아산 8대가 운행이 못 되는 만큼 산림청에서 임차하는 것을 협의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국방부에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헬기를 우선적으로 써 보자고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면 국방부 헬기를 갖다 썼습니까, 이번 산불 날 때?

○산림청장 임상섭 이번 산불 때 한 50대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그 7대 빌린 만큼 효과를 거두신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결론적으로는 산불이 크게 나서 50대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데 국방헬기들이 전문화돼 있지도 않고 또 이게 쉽게 빌려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대형헬기들을 신규 구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3년부터 5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중에 꼭 또 산불이 안 나라는 법이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민간에게 임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대형헬기를 임차해 오려면 해 올 데가 많이 있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주철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빨리…… 아직까지 산불 집중 발생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진화를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야간 진화인데,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걸 제가 들었는데 산림청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한 번 해 본 것 외에는 올해는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아니, 금년에는 강풍이……

○주철현 위원 작년에 해 보셨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2년 전인가 3년 전 안동 산불 때……

○주철현 위원 그래서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게 막 장시간 진화는 하지 못했지만요 했습니다.

○주철현 위원 저희들이 들어 보게 되면 낮에 아무리 꺼 놔더라도 밤새 그냥 뒷집 지고 있는 사이에 바람 불어서 또 번져 버리면 또다시 원상이고 원점이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간 진화가 필요한데, 산림청도 제가 보기에선 직업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민간업체 중에는 야간 진화 허가받은 업체가 있잖아요, 훈련된 업체들이. 왜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쓰셔야지요.

그리고 규정도 바뀌야 돼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에 발화한 산불도 야간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왜 그걸 안 하세요? 첨단 과학 장비가 지금 다 갖춰져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외국 가서 훈련받고 오면 가능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안 되면 민간업체라도 이용을 해서 준비를 갖추셔야지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대형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 됩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민간에서 야간 헬기 진화할 수 있는 데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야간 운행, 야간 진화와 관련된 것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몇 가지 기준을 완화해서 특별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그렇게 야간 진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는, 하는 데가 있는데 안 쓰고 예산 조치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산림청장님, 2023년도에 산림당국의 백서에서 산불 진화 특화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늘렸습니까?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특수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00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435명 정도 늘어난 것 외에는 지금 특별히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김선교 위원 계획보다 한…… 2500명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원래 최종 목표는 적정량은 2500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가능합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계속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인력 공백을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인들로 구성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매우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산세가 험한 현지 지역에서 지상 진화 및 확산 방지, 잔불 정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김선교 위원 지금 전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1만 명 조금 안 됩니다.

○김선교 위원 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상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일자리 사업 정도, 5개월 정도 고용해서 하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농·산촌 지역의 그렇게 젊은 인력들을 구하기도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방지법 통과시켜 주셔서 거기에 산불뿐만이 아니고 산사태, 병해충까지 다 묶어서 상시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처우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앞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문제예요.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의무적으로 최소 10시간씩은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 이후 10시간 이상 교육도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고, 의무적으로는 10시간이고요. 특수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야간 진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해 7월 달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봐 가지고……

대개 그 안전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우리 공중진화대원이라고 103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베테랑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령화 등등 해 가지고 좀 다양한 분들이 진화대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사태 위험이 산불 피해 지역이 한 200배, 100배~200배 정도 된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약 지역의 점검을……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철 아닙니까, 곧?

○산림청장 임상섭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4월 중순까지 현장조사팀이 한 150명 정도 나가서 하고 있고요. 원래는 산사태 지도를 1년마다 업그레이드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현장조사 결과 나오면 바로 반영시켜서 6월 전에, 5월 달까지는 산사태에 관련된 데이터를 업데이트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또 산불 피해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병해충의 증식으로 밀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산불 피해 지역이 새로운 병해충의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제와 사후 관리를 포함해서 통합 관리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산불 피해 지역은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 밀도가 10배에서 한 30배 정도 일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래서 병해충, 특히 재선충은 산불 발생 지역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미리 예방 좀 잘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박범수 차관님, 현안질문하겠습니다.

4월 1일 날 벼 재배면적 조정제 관련해서 추진상황 점검회의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전종덕 위원** 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이것 회의 결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동안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농민들도 계속 저항이 있었고 문제 제기를 해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문구 하나하나 보면 올해 쌀 가격이 하락해도 추가 시장격리 없다, 양곡법 위에 차관님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이것 자체가 오히려 농정 계엄 포고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재배면적 감축 안 하면 시장격리 안 하니까 쌀값 보장 책임 못 지겠다, 이것 농민 협박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것…… 이런 발언을 실제로 하셨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여기 보면 공공비축미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구에 있는. 공공비축미의 경우에도 그동안은 공공비축미는 인센티브로 감축한 농가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겠다 이렇게 그동안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정된 물량도 감축 농가에 배정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제가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마는 가루쌀도 포함했고 구곡도 포함했고 유례없이 자꾸 공공비축미를 계속 이렇게 원칙에 맞지 않게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감축을 한 테다 우선 배정뿐만 아니라 배정된 물량도 감축 농가에 주겠다 이렇게 한 것 자체도 이것 너무 강압적이시고 이제 공공비축미 받으려면 감축 안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협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구 보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잘못 나온 건지 쌀 관련 사업 지원은 감축이 안 된 만큼 지원하겠다, 된 만큼 지원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농가 수 약 99만 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 74%가, 1.75ha에 굉장히 소농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ha를 자투리 땅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감축을 하면 거기에 전락작물을 심겠다는 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승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농지를 안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동안도 계속 제기했던 것처럼 식량자급률의 목표 없는, 식량안보대책 없는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반대를 했고 그럼 목표를 제시해라 그다음 농지보전대책도 제시해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농민 협박용, 결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차관님이 법 위에 서서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거 참여하셨던 데도 보니까 16개 시도의 농정과장들하고 농협 그다음에 농민·생산자단체가 참여했던데 생산자단체도 어떻게 선별적으로 참여를 하신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전종덕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재배면적 감축은 말로만 자율이지 이것은 강압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하나도 변화된 방침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과하시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주장을 하지만 식량자급률 대책 없는 재배면적 감축은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4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한 8만ha가 목표인데 2만ha에서 2만 5000ha 정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 그 목표 채우겠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 재배면적 감축,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재배면적 감축 저는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까 그거 다시 한번만 좀 띄워 줘 보시겠습니까?

○전종덕 위원 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을 어느 분이 정리하셨는지 제가 처음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그때 이야기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쌀 가격이 하락되어도 추가 시장격리는 없음’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제가 말했던 건 이겁니다. 우리가 쌀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서 농가 수입이 더 늘어나고 좋은데 우리 스스로 줄이려고……

○전종덕 위원 차관님, 차관님, 지금 변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올해 가을에 만약에 또 우리가 줄이지를 못해 가지고 가격이 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추가 격리돼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무슨 면목으로 재정당국에 가서 돈을 또 달라고 몇 년째 지금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끼리 좀 최대한 많이 줄여서 그렇게 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공공비축미는 감축 시·군 배정 원칙’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줄이는 사람이 있고 안 줄이는 사람이 있는데 줄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안 줄이면 이 사람 때문에 줄인 사람이 더 손해를 보니까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공공비축미 배정은 각 도별로 얼마나 줄이는지 실적을 봐 가지고 도별로 배정을 할 것이고 도에서도 먼저 줄이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더 달라, 더 많이 배정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한번 좀 보여 주시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종덕 위원 지금 떠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차관님, 지금 이야기를, 차관님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이 차관님의 지침사항을, 말씀하신 전달사항을 적어서…… 어쨌든 공공적으로 이것이 작성이 된 내용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전종덕 위원 이것이 시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본인의 생각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전종덕 위원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쿵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던 것 같아서 쿵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가 예산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살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를 아마 전북에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음에 3ha 얘기는 그겁니다.

○전종덕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3ha에 대해서 해제하자는 얘기는 아마 제 기억으로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 보통 저희가 30ha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여기가 중간에 도로가 난다든지 그래 가지고 30ha로 집단화된 데가 아니고 쪼개져 가지고 여기에는 이만큼 3ha 미만으로 쪼개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서 미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자체장이 스스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땅값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투리 농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제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면적이 저희들이 뽑았을 때 한 2만ha 정

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것을 어느 정도 해제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한 2000ha 정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식량자급률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저희가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자고 하는 게 농지를 날려 버리자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타작물을 심든 휴경을 하든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쌀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쌀 심을 수 있는 용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식량자급률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이거 차관님, 참석하신 분 중에 어쨌든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이에요. 이거 차관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요. 본인이 임의로 정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관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되었다면 이거 반드시 시정을 하십시오. 시정을 하셔서 제대로 보고를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걸 제가 내리지를 않았는데 제가 시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정확한 의미는 전달을 이미 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전달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 내용하고 그동안 우리 국회나 농민들한테 했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저보고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강압적으로 했다면 8만ha를, 지금 2만 7000ha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겠습니까? 강압적으로 안 하고 자율적으로 지자체보고 좀 알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읍소하고 설명하고 농민단체 만나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지금 이 정도 나온 겁니다. 강압적으로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좀 더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면 의원실에 찾아가서 차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산림청장님, 오전에 찾아가는 산불방지교육 제가 얘기를 했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대림 위원 몇 회 했었습니까? 어쨌든 2월 달부터 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동해안 강원지역의 군부대 해병대하고 육군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가 보기에, 아까 계속 공조진화시스템 얘기가 나왔고요. 산림청과 소방청 협업,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얘기가 나왔는데 군 병력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적극적인 입장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서너 건 이상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시장·군수를 넘어서서 산림청

그리고 국가기관이 전체적으로 산불 진화의 협업체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산림청장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한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이번에도 군경들이 동원이 됐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많이 됐습니다.

○문대림 위원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데 실은 큰 효과가, 많은 기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 전문 산불 대응 수준으로 좀 격상시킬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문대림 위원 관련해서 제도개선의 문제도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 의원실하고 함께 협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혹시 한전에서 농사용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 최근에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실무선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떤 입장이시지요?

농림부는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최근에 제가 산업부차관하고는 차관회의에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사실 300kW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하게 되면 최근 계엄 그리고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폭등 그리고 농어가의 경영비 급증, 이러한 차에 농사용 전기료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 관련 부서하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상의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인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한전의 만성적 적자 문제도 이해가 되지만 최근에 어쨌든 최근 몇 년까지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흑자 전환 추세거든요, 한전이. 추세의 반등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농사용 전기를 건든다 이것은 저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해수부가 협업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과 얘기 나누면서 공동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농림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도 이것을 장관급 회의에서도 한 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위원님. 아마 경영상 어려움을 그때는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가 경영 안정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어쨌든 올리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 동물 피해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아무 위원님도 지적들을 안 해서 가

지고……

사진 좀 띄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산불은 사람,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에게도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사태에서 농식품부가 이번에 상황실을 운영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보다는 민간단체나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 위주로 이루어졌었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어져 버린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또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피하면서 문을 닫아 버리거나 풀지 않기 때문에 죽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또 축종별 가이드라인도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해외 사례, 미국·일본·영국 같은 경우에 모범적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빨리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어기구**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동시에 자료 요청……

○**위원장 어기구** 예, 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존경하는 진종덕 위원님이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 중에, 사실 저는 처음부터 3ha 미만 자투리 농지라는 용어가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자투리 농지라는 게. 왜냐하면 대한민국 농민들 평균 재배면적이 1.5ha가 안 되거든요. 3ha면 9000평이어서 농민 입장에서는 대농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진흥구역 지정하는 규정에 의하면 3ha가 이러저러한 개발 사유로 인해서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명칭이 없어서 자투리 농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농림부가 용어를 좀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 이보다는 조금 더 적당한 용어를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지금 2만ha 정도가 이 자투리 농지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이 제도가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지금 현 시점까지 진흥구역에서 해제된 농지의 지번을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지번을 가진 농지가 몇 ha인데 이게 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됐는지를 자료 요청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게 지자체에서 아마 한 거여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자투리 농지 용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용어는 필요하면 저희들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미애 위원** 바뀌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투리 농지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지만 이게 농지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진흥지역만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3ha라는 게 한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구역 중에 이만큼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몇 농가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조그마한 데는 아주 조그마한 데도 있고요, 조금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의 농지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해제가 된 지번이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 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번을 좀 요청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를 자꾸, 작년에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시간차일 뿐이지 이후에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자료 요청이고 의사진행발언이니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위원장 어기구**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농지로 쓰려면 진흥구역 해제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진흥구역 해제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계속해요.

○**전종덕 위원** 하십시오.

○**서삼석 위원** 청장님, 지금 현재 발생한 상황이 있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대구 군위에 발생했다가 지금 꺼졌습니다. 다 꺼졌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차분히 해도 되겠구먼.

1차 대형 산불의 피해는 산림이지요, 주가?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삼석 위원** 주택도 있었고 기타 재산도 있었고 심지어 산에서 난 불이 바닷가에 날아가서 선박도 전소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2차, 3차 추후 피해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입었다 또 입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가슴에 붙은 불은 누가 꺼 줘야 되는가? 예를 들면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산불 진화에 동원된 공무원, 진화대원, 자원봉사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입은 화마, 그 상처, 고통은 누가 해소시켜 줘야 되냐고 묻는데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법적으로 발화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인 경우에는 일단 범정부적으로 국가에서 나서 가지고 좀 먼저……

○서삼석 위원 없으면 유관 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반드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은 더 큰 불입니다, 조기에 이걸 진짜 해소, 진화 못 하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참고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사건에 참여했던 그런 소방대원들에 대해서 이런 시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참조를 한번 해 보시고.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삼석 위원 제가 오전 질의 때 진짜 대형 산불의 주범은 2차적으로는 재정당국이라고 그랬는데 오후에는 그것을 바꿔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재정당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발언을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분 중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위원장님, 재정당국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책의 전면 보완이 필요하지만 실행력을 가지려면 관련 예산 지원이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를 생략하고 내가 중간만 발췌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누가 보낸 내용인지 짐작 가시는데요?

○산림청장 임상섭 글썽요, 잘 모르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전임 청장님입니다.

명심하세요. 직을 거세요, 직을.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삼석 위원 이럴 때 걸으라고 직이 있는 거예요.

청장님, 뭐 마르고 닳도록 하실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는 위원 있음)

○서삼석 위원 아니, 저런 훌륭한 분은 또 중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회의를 통해서 못다 한 말씀 또 이런 대형 산불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될지 정부한테 아니면 국회한테 아니면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아까 한 두어 번 정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패턴에 대해서 이미 산림청에서는 내부 자료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사실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분석이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발생하는 패턴들도 저희들이 다 자료 수집해서 정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 자꾸 제가 기후변화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인명이나 재산과 관련된 피해는 아마 대부분 산림에서 유래해서 더 크게 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고서들도 다 그렇게 돼 있

고요.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현 시스템에서 산림 관리라든지 산불 진화와 관련된 자원이 라든지 진화 자원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게 적합한 수준이라고 산림청장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산림 관리, 산불 진화뿐만이 아니고 그 앞 단계의 관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임도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산림 관리를 국토의 63%를 가진 산림국가에 맞게 그리고 경제 수준 GDP 12위권 정도 수준인데 그 수준에 맞게 시급하게 개편, 기능 강화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삼석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예.

○서삼석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구면. 워낙 점잖으신 청장님 이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날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장시간 진화를 못 한 책임이 왜 산림청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동원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야 위원들이 입이 닳도록 장비를 고도화해야 된다, 추경을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제가 시간을 드린 건데 안 하시네.

한번 해 보세요, 다시.

○산림청장 임상섭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하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재난방지법 제정해야 된다고 2022년 12월 달에 발의가 됐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안 되고 이번 국회에 겨우 통과돼 가지고 벌써 2년 걸렸습니다.

○서삼석 위원 계속해요. 그런 얘기 계속하라고.

○산림청장 임상섭 그래서 그런 법 제정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관련 부처들과 합의라든지 이런 권한이나 기능이 산림청에 좀 더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청을 부로 승격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상금 문제예요.

지금 포상금을 원래 어느 정도로 시행령에다가 하시려고 한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보호법 시행령에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재난방지법 만들어지고 거기 시행령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더 강화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덕흠 위원 시행령이 자꾸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령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소각을 하면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소각 산불이 쓰레기하고 영농 부산물을 합치면 한 30%……

○박덕흠 위원 30%, 그러니까 이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불법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30%나 되는 것을 포상 제도를 확대해서 유도를 하면 소각으로 인해서 나는 산불은 예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또 고의 같은 경우도, 고의성을 갖고 하면 이것을 표 나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덕흠 위원 그런 경우에도 바로 신고가 들어올 수 있게, 연기가 나면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산불 방지에는 더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법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이 이것 하셨는데 아까 직을 걸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직을 걸겠습니다’ 하고 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직을 걸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그냥 해야지.

그래서 지금 산림청장님이 잘못해서 한 거라고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책임자로서의 그런 각오를 갖고 하면 국민들도 참 보기가 좋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박덕흠 위원 그리고 장관님,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저장과수 피해 지원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PPT 좀……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불난 지역에 저런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관찰을 해서 보상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1년 농사지은 게 다 망한 거잖아요, 여기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박덕흠 위원 나무도 물론 결판났지만 남아 있는, 갖고 있던, 저장창고에 있던 과일도 다 이렇게 불이 나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번의 피해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 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사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15일까지 조사를 일단은 일단락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하는 것

이 4월 말이 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농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각지대는 없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가 최대한……

○박덕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가축 피해도 많이 있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많이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여기도 가축재해보험 전체 가입률은 90%가 넘는데 소는 15% 정도뿐이 안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5%,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또 소라는 것이 엄청 어렵게, 사료값도 많이 오르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재해보험도 안 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경북은 보니까 전국에서—나는 우리 지역이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한우 사육두수가 가장 많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특히 산불 피해지역 의성, 안동 이런 데는 전국 2·3위를 차지하고 있고,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거기 신경을 쓰시고.

또 폐사 외에도 흡입성 폐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감염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간접 폐사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래서 그것도 가축질병치료보험 같은 것을 들어 놓으면 폐렴 같은 경우에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데 거기까지 안 들어 놓으신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재 피해에 대해서 직간접 폐사는 모두 보상을 하는데 이 질병이 좀 문제라서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폐사하는 경우에 증빙하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이것 감염병으로 폐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원인을……

○박덕흠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폐사가 되지 않도록 치료비 지원 이런 것도 보상이 될 수 있는데 더 세밀하게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농기계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에 타 버린 농기계의 보상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복구비를 지원하는데요, 복구비가 단가나 보조율이 충분치 않아서 저희가 지금 단가 인상 그다음에 보조율 상향 이런 것들을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박덕흠 위원 이 산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포괄적인 농업 재해보장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걸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송옥주 위원 오전에 저희 국회방송을 시청하고 특수진화대원께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셨어요. 현재 특수진화대원들의 진화복과 헬멧 구입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화대원분들과 산림청이 지금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송옥주 위원 산림청에 이 진화복과 헬멧을 구입하는 데 지난 국감에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서 입찰구매만 고집을 하고 있는데 특수진화대원의 이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분들의 생명이 걸린 부분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는 하지만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구매만 고집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분들의 안전과 또 산불 피해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제3자 단가계약으로 좀 변경을 해서요 일정 기준에 맞는 것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도로 좋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안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질 좋은 것으로, 질 낮고 싼 것이 아니라 질 좋고 안전한 것을 좀 우선적으로 구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송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진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GMO 감자와 관련해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알고 아시지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청장님은 GMO 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현재 GMO, 식품용 LMO 감자에 대해서 수입 승인 여부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GMO의 식품안전성, 위해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옥주 위원 다양한 의견만 있고 뭐 위험하다든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해외적으로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LMO 농산물이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라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학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시면 GMO 감자 과학자, 이게 심플로트사에서 GMO 감자를 개발한 박사인데 본인이 개발하고 나서 이런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판도라의 감자:최악의 GMO’.

이 GMO 감자 개발을 한 부분이 갈변을 한다든지 검은 반점 같은 거는 없어서 보기에 엄청 깨끗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을 억제한 부분들이 병균과 독소를 축적할 수 있고 또는 항암…… 항암이 아니지요. 어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청장님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심플로트사에서 한 SPS-Y9 감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7년 동안 보류를 했다가 지난 2월 달에 갑자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상 압력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된 외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어떠세요, 청장님?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송옥주 위원** 사실은 아니세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것 갑자기 왜 그런데 7년 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식품용 감자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 환경에 위해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입니다. 최종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수입 승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7년간, 그간 수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의문점들이, 추가적인 어떤 자료 제출이 2004년 8월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진행된 겁니다.

○**송옥주 위원** 예,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들에 관련돼서 감자 농사를 지으시는 많은 농업인들께서 걱정을 좀 하십니다. 감자는 아시겠지만 영양변식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의 위해성이라든지 이런 GMO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농진청에서는 문제가 없다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이 한번 심고서 캐내고 나면 계속 역으로 다 이런 똑같은 감자가 생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환경 위해성 심사와 관련돼서 농업인이 좀 참여를 해서 재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진흥청은 농업 환경에 위해성이 있냐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7년 동안 어느 부처보다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농업인이 우려할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신 거예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송옥주 위원**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마지막에 그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최종 결정을 식약처 등이 검토를 할 때 최종적으로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추가적으로 더 의견 수렴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1분만……

다음은 장관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플로트사의 GMO 감자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는 미국산 감자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조건부 수입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수입관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자와 관련해서 기존에 2019년에 3개 주를 대상으로 해서 수입을 허용했고요 또 올해 11개 주와 관련해서 하면 14개 주가 해당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그런데 이 14개 중의 10개 주가 GMO 감자를 생산하는 심플로트사의 핵심 지역이거나 가공 공장이 있거나 거점 시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그냥 감자를 수입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GMO 감자가 어떻게 팔려 들어오지 않나 하는 일반 단체들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수입산 감자 같은 경우에는 가공용으로만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제가 한번 봤더니 64만 3000t 중에서 4만t 정도가 수입되는 감자입니다. 그리고 4만t 전량이 다 가공용으로만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1개 주가 허용이 되더라도 크게 우리 시장에 많이 확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님, 현안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배 재배농가들이 배꽃 냉해 피해를 입은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냉해 피해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보니까 전남 나주, 영암 한 40% 정도 피해로 추정되고 또 배 최대 생산지인 경북 상주 같은 경우 80% 정도, 경남 하동은 한 60% 이상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배가 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암술 부분이 얼어서 죽고 급기야 타 버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약으로 아마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으면 피해 보전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이어서 전수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농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피해 보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배꽃 냉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특약 대상이 아니고요.

○**서천호 위원**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냥 일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농가들이 보험료를 좀 적게 내기 위해서 부보장 특약, 냉해 부보장 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뭐랄까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딱 이것만 보장되는 보험 이것을 별도로 드는 경우, 부보장 보험을 드는 경우는 냉해가 보장이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농작물재해보험을 들면 이것도 됩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보험의 혜택이 되시는 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혜택이 됩니다.

○서천호 위원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서천호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으니까 실태조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파악을 하셔서 가지고 피해 보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천호 위원 연일 쉬시지도 못하고 수고 많습니다.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다들 인식을 하시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천호 위원 단시간 내에 장비, 특히 헬기를 집중 투입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들불은 소방이 책임지고 산불은 산림청에서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잔불은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들불에서 시작해서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절반 정도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은 연장선상에서 즉 진행이 되는데 역할이라든지 지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3단계로 지금 나뉘져 있다는 얘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규정을 좀 통합해서 지휘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산림청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소방 헬기가 출동하려면 6단계를 거쳐야 돼요. 아시지요? 시군에서 도청, 도청에서 산림청으로, 산림청에서 항공본부로 또 항공관리소로. 그래서 헬기가 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아는 골든타임, 늦어지는 이유 자체가 이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들불만 나면 소방 헬기가 맨 처음 출발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 절차 부분을 간소화시킬 거냐, 그러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헬기 관련해서 산불관리통합규정을 보니까 공중진화반장이 각 유관기관에서 동원된 헬기를 지휘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런데 정작 동원된 헬기를 지휘 통제하는 것은 통합지휘본부장 소속의 항공진화반장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헬기 동원은 각 기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헬기를 동원시키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한 시일이,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번에도 현장에서 내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불관리통합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 각 부처별로 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먼저 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산불백서 이렇게, 2023년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대형 헬기 문제, 재난특수진화대 인원 확충 문제 또 임도 확충, 밀도 확대 또 내화수림대 조성 또 식생 구조 전환, AI 기반 ICT 플랫폼 도입 또 GLS 기반 산불 환경 종합 지도 구축, 산불 전문 훈련센터, 지역별 산불 종합방재센터, 입산 차단, 소각 차단, 실화 차단 등 한 열 가지 정도의 개선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하고 그게 윤석열 정부인 2027년까지 그 내용을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3년 하고 이제 대선이 임박한 시점이니만큼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산불 방지 대책의 공과 이거를 좀 정리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4월 중에 대책을 발표하겠지만 그동안 3년 동안 시행된 내용, 현재 상태 그다음에 그 외에 4월 달에 추가로 담을 내용 이거를 자료로 좀 정리하셔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산불로 불탄 지역에 대한 염려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재선충 문제도 말씀하셨고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런 대책도 좀 정확히 하시고요.

저는 이왕 불탄 지역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조림도 잘 하시고, 조림 계획을 해서. 또 우리가 임도 확충이나 이런 게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 훨씬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적으로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인프라 확충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된 오해들 예를 들면 임도 확충하면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이런 내용도 아마 부분적으로 공사하면서 소홀히 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차제에 대규모 단지별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윤준병 위원 오전에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불법 심해양식구조물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질의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설치된 것도 있고 언론에 보면 15호까지 설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도 나온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해수부 입장은 어업협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위반이 아니라 어업협정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윤준병 위원 진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어떤 말씀이신지……

○윤준병 위원 아니, 불법 해양양식 구조물이 지금 양식업과 관련된 어업활동인데 양식업과 관련된 어업활동이 어업협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어업활동을……

○윤준병 위원 그래서 어업규정의, 한중어업협정의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어업에 관한, 어선어업에 관한 규정을 지금 한중어업협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것 좀 제대로들 파악하고…… 그러니까 대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2조 보세요. 2조 범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 또는 어선이 어업활동하는 것을 허가하는 거예요, 이 어업협정 내용이. 그러면 국민이 어업활동을 하는 내용이 담기는데 그걸 가지고 어선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당연히 용인되지 않은 내용이 잠정조치수역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내용이 당연히 허가를 받거나 합의를 해서 이루어져야지요, 어업활동이면. 아니, 해수부가 그런 식으로 내용들을 협정 자체를 제대로 운영을 못 하니까 이 모양 이 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협정의 제2조와 4조에……

○윤준병 위원 한번 읽어 보세요, 2조에 뭐라고 돼 있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어선이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 앞에 ‘타방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국민이 어업활동하는 건 뭐예요? 어선만 어업활동한다고 돼 있어요? 내용들을 제대로…… 규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해석해 가지고 임의대로 운영하니까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제대로 대응도 안 될뿐더러 그러면서 역으로 ‘비례적인 상응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협정대상도 아닌데 왜 비례적인 상응조치를 합니까? 협정대상이니깐 거기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비례적인 상응조치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어업위원회 운영할 때 국장이 가서 대표단으로 가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 이의도 제기하고 항의도 하고 바로잡으라고 요구도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 그게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항의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윤준병 위원 아니, 여러분들 얘기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항의를 합니까? 제대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가 말씀드릴 시간을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임기응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잘못

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대응을, 예를 들어 조치가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조치를 하셔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명해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 나라에서 이익에 부합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침해에 대해서 외교적 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례 대응에 대한 부분은 양식시설임을 중국 측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활동이라든가 조사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비례 대응에 대한 시설물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비례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윤준병 위원** 실제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다 염려하잖아요. 점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일정 시점 가 가지고 예를 들어 해상점유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국의 기본 태도인데 잠식당한 걸 방치하지 않도록 해수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것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산림청장님, PPT 보시면 산불 주전력 헬기의 고장이라든가 불가능한 운행대수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조심기간에 준비태세가 필요한데 지금 헬기의 고장이라든가 운용 불가능한 상태들도 좀 나와 있고요.

경북 지역 산불이 우리나라 전체의 55%인데 산림청에서 경북 지역에 배치한 게 안동에 대형 하나, 중형 3개, 울진에 대형 하나, 중형 2개인데 안동시는 대형이 고장 나 있고요, 중형 3개 중의 하나가 고장 나 있고 울진도 2개 중의 하나가 고장 나 있습니다.

경북 지역이 산불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응 준비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야간 헬기 문제 사실 우리가 확보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산불이 났을 때 헬기를 통한 원점에 물폭탄을 날리는 골든타임입니다. 감사원에서조차 지적을 했었는데 지자체나 광역 시도에서 헬기를 운용해서 하는 골든타임 또 산림청에서 운용해서 하는 골든타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됩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원점 타격을 한다든가 40분 이내에 적어도 산불 집중 지역의 대응체계를 저는 권역별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대형화 산불의 교훈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골든타임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지자체 헬기 30분 도착,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광역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50분 이내 도착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원하고 할 때 자료 문제라든지 산출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50분으로 다 통일을 하되 최초 신고부터 물 투하 시간까지 50분으로 이렇게 하기로 조정이 됐습니다.

얘기하신 내용은 저희가 30분, 50분 내에……

○**이원택 위원** 청장님, 50분 이내의 골든타임은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그래서 지자체 헬기, 광역시도 헬기, 산림청 헬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골든타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강풍이 있을 경우에는 이번에 보셨잖아요. 2km, 3km, 8km 막 날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50분 이내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수부장관님 또 농식품부장관님, 이번 산불 피해가 최소 1조에서 2조라고 합니다,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경북은 한 2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난·안전 기본법이라든가 농업재해대책법의 보상대책이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그런데 특별법에서 보상대책의 기준이 규모로 한다든가 피해액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구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농식품부, 행안부, 기재부를 필두로 해서 이런 재난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재검토해 달라. 이것 우리 해마다 재난 있을 때 논쟁했었잖아요.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그 1조면요 이미 끝났을 수가 있어요. 만약 2조 들어간다고 아마 산림청에 1조만 줘도 이런 산불 안 났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 조기에 진화했겠지요.

그런데 사후약방문으로 1조, 2조 이렇게 들어가고 이걸 특별법으로 가느냐 개별법 개정으로 가느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분 장관님께 지금 경북도청에서는 예를 든다면 NDMS 입력이 곧 끝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15일 자.

○**이원택 위원** 4월 15일 자로 끝나면 중앙부처의 조사 기간이 두 달에서 세 달을 잡는데 이걸 좀 패스트트랙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4월 안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기존의 질서와 체계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질서와 체계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산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보상체계도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달리 접근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은 예를 든다면 재난·안전 기본법이나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서 어떤 현실적 보상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아니면 특별법으로 접근할 건지 한번 견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은 일단 정부 안에서는 특별법도 검토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법률 틀만으로 지원해서는 부족하다라는 것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두 트랙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같이 동의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같이 동의합니다.

○**이원택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시 재해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산불 재해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과 현실적인 안을 만든다는 각오로 사실 행안부나 기재부나 농식품부나 해수부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가 보면 아우성입니다. 그분들 전체를 다 소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데 정말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희들 민주당도 지금 산불특위 차원에서 개별법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특별법도 열어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 재난·안전 기본법, 농업재해대책법 또 관련 법률들을 빨리 정비할 수 있는 건 정비해서 법안 개정에서 여야 간에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켜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도 좀 적극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희용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산림청장님,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률, 재선충병 발병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산불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예측·예상되는 산사태 또 재선충병 대응에도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피해지역 여러 번 다녀오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한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정희용 위원** 고생하셨고 피해지역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아픔이나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원택 간사님께서 특별법도 열어 놓고 고민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경북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큰 재난을 당했을 때 기존의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또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법이 보상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에 대한 조항도 넣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헬기 도입이라든지 농민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보상, 앞으로 향후의 어떤 생계안전 문제까지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형산불 특별법을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희용 위원**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영덕 다녀오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용 위원** 차관님은 다녀오셨어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다녀왔습니다.

○**정희용 위원** 산불로 인해서 어선이 불에 타고 양식장이 불에 타고 이런 피해가 거의 굉장히 드문 경우지요. 처음 있는 경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처음 있는 경우입니다.

○**정희용 위원** 처음 있는 경우이지요. 지금 참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기 때문에 어촌어민들에게도 산불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어민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 보시고 차관님께서 다녀오셨으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민들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앞선 질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관련해서 비판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자존심 상해 하는 거지요. 중국만 무단으로 설치하고 그래서 우리도 비례원칙에 맞게끔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국제 관계다 보니까 같이 설치하면 중국이 더 많이 설치하면 우리도 더 설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이게 그 구역에 막 난립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분쟁이 자꾸 커질 거니까 걱정이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수부에서 외교 채널로 요청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여야 위원님들의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농해수위 차원에서라도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하거나 또는 서해 구조물들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선택해 준다면 해수부가 외교 채널을 이용하거나 중국 측하고 협상하는 데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께 공히 중국에 구조물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조사도 하셔야 되고 또 많이 바쁘실 시간인데 국회에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고 가급적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임팩트 있게 해 주시면서 빨리 현장으로 보내 드리면 어떠실까라고 또 거듭 제안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2차 질의를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3차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희용 간사님 말씀대로, 또 꼭 하실 분, 한 세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불 관련 여러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청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아닙니다.

○위원장 어기구 너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산불재난방지법이 제정돼서 내년 2월 1일 날 시행이 되잖아요. 시행이 되면 산불, 산림 재난 통합관리 및 재난관리 체계에 도움이 됩니까, 많이?

○산림청장 임상섭 예, 크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어기구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일단 과거에는 산불, 산림 연접지와 관련된 관리 권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대폭 강화가 됐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진화대 자격이었는데 산사태라든지 이렇게 통합해서, 산불이나 병해충이라든지 통합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개편을 하면 훨씬 더 전문화되고 처우가 개선이 된 진화 대응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인력 통합 운영 등등 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서삼석 위원님께서 ‘산불 책임은 재정 당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만큼 예산이 지금 절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들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당장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확충해야 되는데 하나 하나 물어볼게요.

산불 방지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위원장 어기구 이게 그러면 임도를 지금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어요, 임도. 우리가 임도가 오스트리아나 독일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래서 주철현 위원님은 강제라도 해서 임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어떻게 확정하시겠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산림청장 임상섭 산불진화임도뿐만 아니라 간선임도, 지선임도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주 자부담 문제가 있고요.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크게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예산 부족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직접 계획하고 또 강제, 땅을 수용하고 또 산주 동의 문제가 아니고 재해와 관련된 것은 좀 강하게 임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준병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있어서 거기에 좀 담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런 부분을 담아서 임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것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이 나면 근처에 이쪽 취수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산불 진화 취수원?

○**산림청장 임상섭** 예.

○**위원장 어기구** 이런 취수원들은 충분합니까, 우리나라에?

○**산림청장 임상섭** 예, 우리 헬기를 이용해서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은 다 DB화가 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동식 저수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ℓ, 40t 정도를 담아서, 카모프 헬기가 한 열세 번 정도 물 뜰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운영을 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취수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꼭 문제가 없다기보다는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화……

○**위원장 어기구** 그게 가까울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화 효율이 올라가는데 전산화라든지 이동식 저수조라든지 또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댐 유역, 댐 같은 것 활용이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농가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위원장 어기구** 이런 주택들에 산불 소화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떻느냐 이런 말씀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마을 단위의 소화전은 지금 약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특히 상수원 같은, 수도 같은 게 마을, 부락 단위로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더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재난방지법 말씀하셨는데 재난방지법에서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이나 할 때 산림연접지역에 있어서는 산불하고 되도록이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산림청, 지방산림청장이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시장·군수한테 내도록 지금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일단 물을 뿌려서 적셔놓으면, 이번에 마을 하나 우리가 잘 보관, 보존한 예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겠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불에 다 탄 산, 이게 지금 다시 복구하려면 한 10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산림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 조성 계획을?

○**산림청장 임상섭** 복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토양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데 한 100년 정도 걸리고요. 식생만 복원되는 데 한 30년 정도가 걸립니다.

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인명 피해, 2차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유발되는 마을 연접지역, 인가 연접지역에는 벌채를 해서 응급 복구를 합니다. 일단 올해 태풍, 우기 전까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산속 깊은 데라든지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없는 경

우에는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차년도에 하든지 3년째 하든지 이렇게 하고 또 특히 일부러 식재를 해서 조림을 할 필요가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자생적으로 나는 수종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 복원, 생태 복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리고 이게 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불에 강한 숲 조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소나무가 그냥 거의 막 이렇게…… 활엽수 이런 것을 많이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아까 침엽수, 소나무림 때문에 산불이 확산이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빠르고, 화염 강도도 세지고 마찬가지로인데 활엽수는 또 활엽수 나름대로 산불 진화하는 데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활엽수림이, 혼효림이 많았는데 활엽수 낙엽층이 한 40cm~1m 정도까지 쌓여 있어서 헬기로 많이 물을 뿌려도 낙엽층까지 침투가 안 되고 다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면 재발화되고 바람 불면 재발화되고. 그래서 피해 면적은 산청이 적었지만 진화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훨씬 더 길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침엽수, 소나무림이 화재에 취약한 게 맞기 때문에 산불하고, 대신 목재 자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송이버섯 채취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산주 의견들을 더 들어 가면서 재해에 안전한 방향으로 산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산불에 강한 숲 조성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진화 장비의 문제인데 이게 이번에 1000ℓ 짜리 헬리콥터, 작은 헬리콥터잖아요. 이게 가서는 물을 공중에다 그냥 흩어지게 뿌리고 만다는 거예요. 진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바람으로 불을 더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만ℓ, 한 8000ℓ 정도가 되어야 골든타임, 초기 진압 여기에 좀 효과가 있다. 조그만 헬기가 가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불 진화 헬기를 확충하고 특히 대형 헬기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대형 헬기는 저희가 계약한 게 현재 4대를, 대형 헬기만 4대를 계약해서 도입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소형도 이제 중형으로 바뀌 가는데 소형 헬기가 가진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임차 헬기를 19대인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소형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소형으로 하는데 그것은 좀 기동성이 빠르고요. 초기에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잔불 정리나 뒷불 정리를 할 때 헬기를 이용할 때는 대형 헬기로 활용하는 것은 조금, 물론 그게 더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는 소형 헬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산림 내 나무 양이 많아져서 연료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형화, 진화장비는 대형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예산 확보가 더 문제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위원장 어기구 이게 도입하는 데 3년이 걸린다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3년 걸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미리미리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헬기는 밤에도 못 뜨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산불 진화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당진에 또 불난 데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끄더라고요, 지상에서. 가서 다 잔불 정리하고.

여기에 고성능 산불 진화 차, 이번에 벤츠인가 그것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맞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강력하더라고요, 호스가. 멀리도 나가고. 이런 차들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야간 진화장비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그것도 고성능 진화 차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하신 벤츠사에서 나온 그것도 지금 32대, 각 기관별로 할 수 있도록 32대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비용이라든지 조금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국산화한 다목적 진화 차량이 있습니다. 국산화 다목적 진화 차량 대체해서 지금 최대한 300대 정도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 확충 문제, 인력의 효율적 운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잘 유념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가질의인데요. 네 분 신청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병진 위원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청장님, 우리 영덕이 송이의 주산지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병진 위원 고로쇠라든지 이런 송이버섯, 채취 임산물에 대한 지원 대책 있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북구 관련된 지원은 현재 규정에는 없고요. 울진·삼척 산불 피해 사례로 보면 생계비라든지 이런 성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도 보니까 600여 곳의 농가 국민 성금으로 배정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방법이 적극 활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트럼프 2기 관세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뒤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경주에서 뭐가 열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APEC……

○**이병진 위원** APEC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도 APEC 지원 특별위원회로 선임이 돼서 7일부터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큰 행사입니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다 올 걸로 저는 사료되는데 우리 식량 안보와 관세, 농정 현안을 한번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무슨 회의 했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정책실무회의를 경주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경주에 집중되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서 각국의 농정 기관이라든지 부처하고 접촉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벌써 의제라든지 접촉이 됐을 걸로 보는데 기우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또 단순히 FTA 관세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수출입 다변화라든지 K-푸드 활로 개척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 경주 선언에 농정에 관한 어떤 과제도 함께 우리 21개 회원국 간에 나눌 수 있다면 나뉘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고견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농정 현안 해결 그리고 또 주요국과의 농업 협력 이런 것들을 그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장관회의가 있고요 또 10월에 정상회의가 있으니까요 두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요. 우리 실무자, 뒤에 계신 분들 장관님과 잘 협조해서 이번에 소기의 목적 달성했으면 하는 그런 기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장님이 오늘 많이 대상이 됐는데, 참 시간이 없네요.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기운을 더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오늘 장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들도.

해수부장관께 북극항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나 해빙 가속화에 따라서 북극항로의, 하여튼 간에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 전략이 필요한데요.

장관님, 2013년도에 국내 최초로 북극항로를 이용한 화물 운송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리 민간 업체들하고 13년부터 시범 항로 계속해 왔고 이게 열렸을 때 얼마만큼의 파급효과와 국가적인 이익이 있는지를 쭉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13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북극항로를 통해서 나프타 4만 여 t이 들

어왔는데 러시아 발트해에 있는 우스트루가항에서 출발해서 북극을 거쳐서 여수·광양항의 사포항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최초인데요. 현재 보니까 22년도에 북극항로 물동량 3400만t 중에서 분류를 좀 해 보니까 LNG하고 가스 응축수가 한 60%인 2050만t이고 또 원유 및 석유제품이 722만t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그래서 비컨테이너형 자원 화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현 실상은 이런데, 현재 이재명 전 당대표께서도 북극항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존경하는 문 위원님께서도 법안도 발의하고 하셨는데 이러한 북극항로가 마치 그냥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항만 연결하는 것처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쭙보고 싶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거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어느 특정 항만을 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국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 항만의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벌크선박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재 북극항로에서 컨테이너선박이 날개를 달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 그다음에 관광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는 전국 항만들의 고유의 특성들을 살려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철현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항만별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고려해서 국내의 모든 항만들이 북극항로를 잘 활용하고 또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수부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또 벌크화물, 액상화물과 관련해서 남해와 여수 사이, 여수해만의 해상환적 이게 지금은 중소형선박만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대형선박 할 수 있게 좀 풀어 주셔야 돼요. 몇 번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 부처에서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데, 없는데 중지시켜 놓고 딴 말하시면 어떡해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발언에 앞서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2차질의 때 했던 쌀 재배면적 감축 점검회의 결과를 차관님께서 본인이 하실 말씀이 아니시라고 하니 그날 회의 자료하고 회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이 있었지만 트럼프 2기 되면서 관세와 통상 압력이 심해지고 있지요? 특히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LMO감자라든지 그리고 30개월령 소고기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 트럼프가 쌀 513% 관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자국의 최악의 무역장벽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 압력이 우리 농정 분야에도 밀려올 가능성이 크고 또 농업을 희생시키고 축소시켜서 이 통상 협력들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PPT 봐 보실래요? 미국 쌀협회 보고서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쌀 관세 유예화를 두 번을 거치면서 우리가 40만 8000t의 TQR, TRQ 물량을 지금 수입하고 있고 거기에서 각 5개의 나라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당국에서도 밥쌀용 쌀 30%를 의무적으로 했다가 2015년부터는 중단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이 쌀협회에서는 수입쌀 30%를 일반 소비자 대상 식사용 쌀로 따로 지정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한국 정부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혹시 이 협회가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우리나라와 미국 당국과 별도의 협약이나 부속합의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계속 왜 이렇게 자료가 나올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글썄요,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2004년부터 15년인가요, 그렇지요? 그때는 있었습니다.

○전종덕 위원 다음 PPT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15년에 우리 관세화하면서 이것은 유예가 됐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보도자료도 찾아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농림부에서는 별도의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보시면 미국 의무수입량 23년 기준 13만 2000t 중에 지금 밥쌀용으로 수입되는 5개 나라 중에서 미국만 유일하게 수입의 양이 많고 4만t이 그대로 수입되고 있거든요. 이 비율이 30%예요. 그러면 미국 쌀협회가 낸 내용하고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좀 신뢰성이 더 높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농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사실이 아니다, 이거 시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시정해 달라고 어디에……

○전종덕 위원 아니, 사실이 아닌데 미 협회보고서에서 이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협회보고서에 대해서요?

○전종덕 위원 아까 PPT 보여 드렸잖아요. 미국 쌀협회에서 보고서를, NTE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되는 미 쌀협회 보고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우리 정부가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시정조치를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자국의 정부한테 건의하는 내용을 담아서 NTE 보고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쌀협회에서 말하자면 우리한테 나름대로는 유리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시정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종덕 위원 이게 유리한 얘기가 아니지요. 밥쌀용 쌀 수입을…… 지금 밥쌀용 쌀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쿼터 물량 중에 밥쌀용으로 지금 30%를 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만 밥쌀용 쌀이 안 들어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들어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예, 30%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30%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한 것은 없는 거고요, 위원님.

○임미애 위원 4만t 들어오고 있고……

○전종덕 위원 우리는 중단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미국 협회에서는 아직도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하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 그래서 그 시정조치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당면해서 쌀 들어온 수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일본은 재협상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물량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같은 경우는 사료용이나 원조용으로 61%가량을 방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4%만 방출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중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쌀이 남아돈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수입쌀이 우리 쌀 농가들이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협상할 때 그 전까지는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된다는 게 협정문에 있었고요. 15년부터는 그게 협정문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거든요. 아예 없으면 WTO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접근을 저희가 임의로, 아니면 그 나라에 불리하게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수입쌀

이 밥쌀용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쌀이 몇 년째 계속 과잉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22년까지는 매년 밥쌀용 쌀을 저희들이 방출을 했습니다, 시장에다 밥쌀용으로. 그런데 2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밥쌀용 쌀을 한 톨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정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가공용으로만 일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내산 쌀 시장을 보면서, 국내 쌀 가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윤준병 위원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윤준병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농업 민생 4법과 관련해서 꽤 의지를 가지고 개정을 해 보겠다고 국민들에게 소득안전망 또 재난안전망을 만들어 내겠다 해서 꽤 공력을 기울이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성안하고 했는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서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해 12월 13일 날 상임위, 금년 1월 8일 본회의 또 1월 9일 상임위 이쪽에서 입법취지는 존중한다, 정부도 같은 마음이다, 대신에 좀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출할 테니 논의해 달라 이렇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지금이 4월이에요. 3개월 동안 대안 제출을 안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내용들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겁니까, 안도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그러면 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윤준병 위원 최종적으로 다 지난 다음에, 정권 다 끝나면 제출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아니요. 저희 지금 관계부처하고 재정소요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윤준병 위원 아니, 그 당시에 3개월이 지나도록 협의하고 있을 정도 내용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안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저희 그때 안이 있었고요. 그때……

○윤준병 위원 바로 가져오시기 바라고,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또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 부분도 재난이 발생할 때 국민적인 관심이 있을 때 임기응변식으로 취하는 듯한 태도 저는 이거 옳지 않아요.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이게 재해대책법과 관련해서 농산물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과 관련된 내용도 2년 전에 수해가 있었을 때 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부가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여야

합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회피용으로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트럼프 쌀 관세와 관련된 질의들이 있었는데 차제에 40만 8000t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준이 지금 우리가 7.96% 소비량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소비량을 따져 보면 17만, 한 18만t이 지금 줄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지금 신안의 태평염전 인도보류명령과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예전에 돈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의 개선 조치는 완료됐다고 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소명 과정에서의 오해 때문에 조금 불요할 것 같고요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만 불 정도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소명서 제출을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고, 정부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신안 소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명하고 바꿔 놓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요.

○**윤준병 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도 아까 농업 4법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정소요까지 포함해서 관계부처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위원님도 마침 이 법을 또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또 발의를 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함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재협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 그리고 우리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농식품부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하여튼 그 영향을……

○**윤준병 위원**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입장에서 최대한 하고요. 그런 조율을 하는 것은 산자부가 전체적인 내용 가지고 조율하는 거예요. 농식품부가 산자부장관도 아니면

서…… 농식품부 입장을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쉬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아닙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가 책임을 갖고 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저는 서삼석 위원 것까지 2분 더 하려고 했는데 2분도 안 주시네요, 손 이렇게 들었는데.

해수부장관님, 아까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닙니다. 그……

○**문대림 위원** 상당수의 미래학자들이 북극항로를 통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북극항로하고 틀린 얘기였습니다.

○**문대림 위원** 제 말 들으세요.

북극항로를 통해서 새로운 국제 패권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최근 미국이 그린란드 영토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고요. 또 중국이 빙하 실크로드 또 근북극 국가 논리를 내세우면서 인접 국가로서의 자원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고 일본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북극항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추진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빙하가 없는 북극 이젠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있고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서 자원의 미래, 물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 발의된 거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한번 봐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던 거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얘기 들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느 의원실에서 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했었고요.

22일 날 북극 펀드 10조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또다시 국회에서 2시에 있습니다. 해수부 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글로벌한 물류의 허브 대한민국, 그게 여수·부산 어디든 포함 이든, 제주 빼놓지 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리고 오해의 소지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문대림 위원 나중예. 1분밖에 안 남아서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보장은 없고 비용만 내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장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가입된 곳은 두 곳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화재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보험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차원에서 관련해서 실효적 대책을 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정리된 게 있는데 임미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종료가 되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보장 대상에 관한 문제, 품목 확대에 관한 문제, 보험료 부담 완화에 관한 문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책보험의 제도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5월 달 말씀 주셨는데 미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의원실로 와서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까 하고 싶은 말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안전에 관련해서 주철현 위원님하고 언급했던 내용은 십투십(Ship To Ship) 해상 급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게 안전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북극항로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험에 미가입한 피해 양식어업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주셔서 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했고요. 양식 생물, 시설, 경영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 생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재해복구비를 통한 충분한 보상이 부족합니다, 현재요. 그래서 양식 생물 입식비·복구비 단가를 상향하는 등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높습니다. 금번 산불 피해 양식어업인에 대해서 실제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 단가 상향을 관계 부처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시설 부분에서는 양식장 시설 피해 입은 2개 어가에 대해서는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 우선 선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단 친환경 양식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히트펌프 등 친환경 설비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4월에 완료를 하고요. 양식장 재건 돕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나머지 3개 양식장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나머지 3개……

○문대림 위원 2개는 이걸로 지원하고 나머지 3개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양식장들은 4월 9일 날이지요, 어

제 보험금 지급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필요한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청이 되면 바로바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하는 지금 마음입니다.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실게요.

○임미애 위원 여러 지적 중에 농림부장관님, 실제로 이번에 추경하게 되면 올릴 예산이 어떤어떤 건지 항목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은 협의 중에 있어서요, 위원님.

○임미애 위원 말씀하시기가 어려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큰 덩어리만 말씀드리면 산불 대응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무역 관련……

○임미애 위원 그러면 산불 대응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다음에 민생 안정 이렇게……

○임미애 위원 저희가 지금 농기계가 다 탕쥬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삽 한 자루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올린 산불의 경우 농기계에 대한 지원을 35%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65% 자부담 중에서 55%는 융자, 10% 자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농가 입장에서는 융자라는 것이 이게 또 빚이쥬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농기계 지원의 지원폭을 좀 높여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검토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지금 하여튼 보조율도 상향시키고요, 그리고 단가도 인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수농가 피해가 굉장히 크쥬아요. 그런데 과수농가가 다시 입식을 할 수 있도록, 묘목을 심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쥬다라는 계획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려면 묘목에 대한 증식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진흥청하고 협의해서…… 사실은 묘목이 없으면 올가을에 심고 싶어도 과수원을 개원하지 못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가 양을 파악했고요, 위원님.

○임미애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양은 충분히 있더라고요. 민간 종묘사랑 다 했더니……

○임미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원하는 품종을 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충분히 있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과 관련된 예산도 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농가가 다시 과수원을 열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임대 농기계의 경우 지자체에서 임대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율을 좀 상향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장님, 아까 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던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진흥지역 해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고요. 경기도만 한 100ha 내외 정도로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주로 경기도 어디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걸 저희들이 지금 지번을 갖고 있지 않아서 한번 받아 보고요. 혹시 개인정보나 이런 것과 관련되는지까지 따져 보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요청을 한 이유는 이게 주로 경기도에 몰려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있어서 요청드렸고요, 특히 양평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경기……

○임미애 위원 아니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경기도도 그렇고 대부분, 0.1ha, 2ha도 있고요, 아주 소규모가 대부분입니다.

○임미애 위원 지번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그것까지 드릴 수 있는지,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정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의견들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저를 포함해서 조경태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정희용 위

원님, 이병진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김상욱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정태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김종구

정책기획관 김정주

국제협력관 정혜련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차관 송명달

기획조정실장 이시원

해양정책실장 김성범

수산정책실장 홍래형

해운물류국장 허만욱

항만국장 남재현

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수산정책관 서정호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국립수산물과학원
원장 최용석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
차장 서효원
기획조정관 이상호
연구정책국장 김병석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기술협력국장 김황용
산림청
청장 임상섭
차장 이미라
기획조정관 이종수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보호국장 최영태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김용관
산림항공본부
본부장 김만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강호동
전무이사 지준섭
상호금융대표이사 여영현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송춘수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최창호
사업대표이사 강대재
기획전략상무 성상제
경제사업상무 박영선
상호금융상무 홍성조

【보고사항】

○의안 회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9)

이상 4건 3월 4일 회부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4)

3월 5일 회부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5.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5.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3. 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4)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5.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5)

이상 7건 3월 6일 회부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이상 3건 3월 10일 회부됨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3)

3월 11일 회부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3)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6)

이상 4건 3월 12일 회부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882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이상 4건 3월 13일 회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이상 4건 3월 14일 회부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1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3월 17일 회부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2)

이상 2건 3월 18일 회부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2)

이상 9건 3월 20일 회부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4)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2025. 3. 2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5)

이상 9건 3월 21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2)

이상 8건 3월 24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4.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7)

3월 25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7)

이상 2건 3월 26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7)

3월 27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3)

이상 5건 3월 28일 회부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4)

이상 7건 3월 31일 회부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31.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0)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2025. 3. 3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31.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31.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8)

이상 4건 4월 1일 회부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0)

먹거리기본법안

(2025. 4. 1.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4)

이상 9건 4월 2일 회부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1)

이상 2건 4월 3일 회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4)

이상 2건 4월 4일 회부됨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4. 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4월 7일 회부됨

필수수산물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4. 7.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6)

이상 9건 4월 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4.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7)

3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5.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2)

3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9)

3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3. 12.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3)

3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8)

3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0)

이상 5건 3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3)

이상 2건 3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21.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5)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25.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이상 2건 3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2025. 3. 27. 나경원 의원 등 28인 발의)(의안번호 2209422)

3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2025. 4. 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1)

이상 2건 4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6)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3.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5)

이상 3건 4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박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4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1)

3월 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3월 1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림축산식품부	1	0	1	10	2	4	18
해양수산부	3	0	0	17	7	7	34
농촌진흥청	0	0	0	10	14	0	24
산림청	3	0	3	4	1	2	13
해양경찰청	1	0	1	0	1	0	3